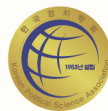


COVID-19 Before & After, 정치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

 **KOSSE**REC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KPSA

한국사회과학협의회 · 한국정치학회 공동 특별 학술세미나

COVID-19 Before & After, 정치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

- 일 시 _ 2020년 12월 22일(화)
- 장 소 _ 지상세미나
- 주 최 _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정치학회, SSK 지원사업단
- 후 원 _ 한국연구재단

초청의 말씀

코로나 19 팬데믹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특히 정치환경은 시민의식의 변화를 통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19는 비대면 상황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약화시켜 정치기관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은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이나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코로나 19 전후의 정치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한국정치학회는 “COVID-19 Before & After, 정치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코로나 이후 한국의 정치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려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 12월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김 정 식

한 국 정 치 학 회 회장 윤 성 이

프 로 그 램

[세 선 I] COVID-19 Before & After, 정치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

- 발표 1 : 코로나 19 팬데믹이 가져 온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의 관계 변화 연구:
정치 및 기관 신뢰를 중심으로
차재권(부경대)
토 론 : 이재현(충남대)

-
- 발표 2 : 코로나 19와 한국의 민주주의: COVID-19 Before and After
송경재(경희대)
토 론 : 조희정(서강대)

-
- 발표 2 : 코로나 19와 세계화에 대한 인식 변화
정재환(울산대)
토 론 : 공민석(서강대)

[세 선 II] 라운드테이블 종합토론 : 포스트 코로나, 정치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

- 토 론 : 윤성이(경희대, 한국정치학회장)
서정건(경희대)
조진만(덕성여대)
장우영(대구카톨릭대)
-

목 차

| 주제발표 및 토론 |

- 발표 1 : 코로나 19 팬데믹이 가져 온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의
관계 변화 연구: 정치 및 기관 신뢰를 중심으로 3
- 발 표 : 차재권(부경대)
 - 토 론 : 이재현(충남대) / 27

- 발표 2 : 코로나 19와 한국의 민주주의:
COVID-19 Before and After 31
- 발 표 : 송경재(경희대)
 - 토 론 : 조희정(서강대) / 51

- 발표 3 : 코로나 19와 세계화에 대한 인식 변화 53
- 발 표 : 정재환(울산대)
 - 토 론 : 공민석(서강대) / 73

| 라운드테이블 종합토론 | 77

- 윤성이(경희대, 한국정치학회장) / 79
 - 서정건(경희대) / 83
 - 조진만(덕성여대) / 87
 - 장우영(대구카톨릭대) / 89
-

주제 발표 및 토론

[발표 1]

코로나 19 팬데믹이 가져 온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의 관계 변화 연구:
정치 및 기관 신뢰를 중심으로

2020. 12. 22.

차 재 권
(부경대)

코로나 19 팬데믹이 가져 온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의 관계 변화 연구 : 정치 및 기관 신뢰를 중심으로

차재권(부경대학교)

I. 서론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3월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이래, 2020년 11월 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4,969만 여명에 달하고 있고 사망자도 약 124만 명을 넘어섰다¹⁾. 전문가들은 무증상자나 검사 및 대응 미비로 공식 집계에서 누락된 감염자수를 고려해서 10~20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최윤식 2020). 이는 역사에 기록된 전염병 중 가장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것들이 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위기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뉴노멀 시대를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믿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계로 나누어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뉴노멀 시대의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모든 부문에서 ‘언택트(Untact)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레퍼토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언택트란 비접촉, 비대면을 뜻하는 용어로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행위를 하거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접촉식 상호작용이 확대되었다. 재택근무 및 원격회의, 비대면 수업 등이 활성화되었고, 온라인 쇼핑 및 비대면 배송서비스의 확대로 언택트 소비가 더욱 일상화되었다. 또한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그리고 AI(Automatic Intelligence)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언택트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는 이제 사람 간 대면 문화보다는 비대면, 비접촉, 원격, 디지털화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존재인 개인은 사회 활동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한다. 타인과의 유대관계, 즉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와 강도가 커질수록 개인은 사회자본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르디외(Bourdieu 1986)에 따르면 사회자본이란 사회구성원들 상호 간 제도화된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와 연계된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일종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사회관계로부터 획득되므로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원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은 버트(Ronald Burt), 린(Nan Lin), 포르테스(Alejandro Portes)와 같은 사회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Grootaert et al. 2004; 류태건 2020, 17 재인용).

이처럼 사회자본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신뢰를 조장한다고 간주하는데,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개인이나 사회의 신뢰가 증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 개인, 집단 등과 같이 행위자들 간 연계 형태와 그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구조를 의미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정치신뢰 또한

1)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 <https://coronaboard.com/global/ko/> (검색일: 2020.11.07.)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정치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나 구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즉 일반적 상황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오히려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와 크기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강한 네트워크’와 ‘약한 네트워크’로 나누어 사회적 네트워크가 정치신뢰와 제도(기관)신뢰를 약화시키거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II장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살펴보는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인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 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이루어진 사회자본에 관한 두 번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선 II장에서의 이론적 논의의 성과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실증분석모형을 제시한다. IV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끝으로 V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글을 맺는다.

II.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적 영향과 사회자본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영향

1) 코로나19 팬데믹의 추이와 현황

세계보건기구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은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약 3달 뒤인 2020년 3월 11일에야 공식적인 세계적 대유행(pandemic) 단계에 이르렀음이 확인되었다(WHO 2020). 이후 코로나19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2020년 11월 초 기준으로 세계 전체 확진자 약 4,969만명, 사망자 약 124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2020년 1월 20일 최초 발생하여 현재까지 확진자 27,284명, 사망자 477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 유럽 등과는 달리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는 능동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전세계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세계와 각 국가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현재로서는 거의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측을 뛰어넘는 대유행 상태에 있다. 2020년 11월에 접어들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인 2차 대유행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WHO를 포함한 세계적인 전염병 전문가들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인류와 함께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

2)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적 영향

유계숙 외(2020)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나타난 기

혼 성인 남녀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 분석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부가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중위소득 미만 계층의 여성에게 강한 스트레스를 부여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성별과 계층에 따라 각각 다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가들이 도시봉쇄와 같은 강력한 대응책에 의존토록 했고 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현저히 줄어들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적극적인 봉쇄정책을 펼치는 대신 개방적인 시각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낮은 단계의 관리정책을 활용한 국가들에서조차도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이른바 ‘언택트(untact)’ 혹은 ‘온택트(ontact)’²⁾ 사회의 도래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초래한 부정적 영향은 사회적 관계성의 감소 외에도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개인이나 집단을 사회적으로 낙인 찍어 괴롭히는 집단병리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그런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회 구성원 간에 불신과 혐오가 조장되는 사회적 부작용이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Kanupriya 2020).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양식 등 사회와 문화를 크게 변화시켰고, 더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곳곳의 대면 문화는 비대면, 원격 사회, 디지털화되고 있다. 교육, 사회활동, 일, 사람 간 상호작용, 그 외의 각종 서비스 등은 원격 및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뉴노멀의 새로운 시대상을 구성하게 된다. 재택근무, 원격회의, 원격수업 및 비대면 수업 등이 활성화되었고, 온라인 쇼핑 및 비대면 배송서비스의 확대로 언택트 소비사회가 일상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 또한 큰 충격을 입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위해 세계 각국이 국경통제, 여행 제한, 휴교 및 휴업, 이동 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수요와 공급, 금융시장에서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실물경제의 부진, 금융시장의 악화,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입법조사처 2020). 고용시장 또한 큰 충격과 변화가 있었다. 많은 기업과 사업장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산하거나 문을 닫았고, 신규채용보다는 디지털화, 원격화, AI등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시장도 위축되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신뢰를 약화시킨다. 사회 전반에 걸쳐 언택트 사회가 도래하면서 일상 속의 혐오와 차별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형성했던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는 재난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언택트(Untact)란 ‘접촉하다’라는 의미의 ‘콘택트(contact)’에 부정적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단어로, 매장의 키오스크 주문 등 직원이나 다른 소비자와 접촉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경향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 배달이나 e커머스 소비까지 포함한다(매일경제용어사전). 온택트(Ontact)란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흐름이다(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즉 언택트가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문화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온택트는 외부와의 연결을 추구하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관계를 맺는 방식을 의미한다.

2.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자본: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

1)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란 개인 간, 개인-집단 간, 집단 간 등과 같이 행위자들 간의 연계 형태를 의미하며 그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큰 사회구조(혹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들을 연결시키는 특수한 내용, 예를 들어 의사소통 관계, 권력 관계, 정서적 관계, 교환 관계 등을 가진 사회적 관계들의 여러 가지 가능한 집합체들 중의 하나”(Emirbayer & Goodwin 1994, 1417), 또는 좀 더 단순하게 “사회적 행위자들이 서로 맺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Scott 2000, 3)이라고 정의된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이나 집단 등 사회적 행위자들이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관계들이나 관계들의 사회적 관계망 혹은 연결망에 대한 총칭이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특히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데, 만일 관계가 지속적이지 않다면 그 관계나 네트워크는 붕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차재권·류태건 2017).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활동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회자본은 이러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는 자원으로 타인과의 유대관계, 즉 네트워크의 크기와 강도가 커질수록 개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자본을 활용하게 된다(Burt 1992).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는 유대의 강도(strength of a tie)를 기준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한 유대(strong tie)와 약한 유대(weak tie), 유대의 결여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친구는 강한 유대, 지인은 약한 유대, 전혀 교류가 없고 간단한 목인사 정도를 나누는 사람끼리는 유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다. 즉 사람들은 혈연, 지연, 학연, 직업, 이해관계 등에 따른 동질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 관계와 관계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Granovetter 1985). 이와 비슷한 시각에서 김용학·김영진(2016)은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크기, 강도, 밀도 등)을 도출하고, 관계의 특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퍼트남(Putnam 2000)은 사회자본을 결속형(bonding)과 교량형(bridging)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있다. 결속형은 사회적 배경이 유사한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로 질적으로 밀접하고 강한 유대관계를 갖는 반면, 교량형은 사회적 배경 등이 다르고 일시적인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사회자본론 역시 사람들의 사회관계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의 근거로 간주한다. 사회자본과 관련해 포르테스(Portes 1998)는 개인들이 타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나 혜택 등의 자원이라고 보는 반면, 울콕(Woolcock 1998)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행태적 특성(신뢰나 호혜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관점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의 근거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네트워크의 종류와 특징은 다양하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와 크기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강한 네트워크’와 ‘약한 네트워크’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2) 신뢰

신뢰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Deutsch(1958, 266)에 따르면 “신뢰란 어떤 행위자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루만(Luhmann 1979, 4)은 초기에 “신뢰란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한 행위자가 어떤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그는 확신(confidence)과 신뢰(trust)를 구분하여 두 개념 모두가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기대와 관련이 있고, 기대를 형성하는 다른 양상이라고 보았다(1988, 97). 콜만(Coleman 1990)은 “신뢰란 한 행위자가 택하는 위험이 다른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고, 기든스(Giddens 1990, 34)는 신뢰를 확신과 구별되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확신의 한 유형 즉 ‘신빙성에 대한 확신’으로 간주한다. 경영학 분야의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메이어 외(Mayer et al. 1995, 712)에 정의에 따르면 신뢰란 “타인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이 자신에게 중요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해 타인의 행동에 따른 자신의 취약성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루소 외(Rousseau et al. 1998, 395)에 따르면, 신뢰란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기반하여 취약성(vulnerability)을 수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차재권 · 류태건 2017). 즉 자신의 불확실한 기대 속에서 타인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믿고자 하는 심리상태를 신뢰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신뢰의 본질은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불확실성 속에서 한 행위자(신뢰주체)가 다른 행위자(신뢰대상)에 대해 어떤 특성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심리상태”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때 기대의 내용은 신뢰하는 대상의 어떤 행위나 의도, 또는 역할이나 속성이 될 수 있다.

신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므로 유형의 분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신뢰의 유형은 신뢰가 형성되는 근거를 기준으로 한 분류와 신뢰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가 있다. 먼저 신뢰가 형성되는 근거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사회학 분야에서 주커(Zucker 1986)는 신뢰의 유형을 과정근거, 특성근거, 제도근거 신뢰로 분류한다. 과정근거(process-based) 신뢰란 한 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간에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신뢰가 쌓이면서 형성되는 평판에 근거해서 형성된다. 특성근거(characteristic-based) 신뢰는 한 개인이 속하는 집단의 귀속적 특성에 근거해서 형성된다, 예를 들어 가문이나 인종 등의 동질성을 근거로 그 대상의 귀속적 특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신뢰 유형으로, 신뢰주체자와 신뢰대상 간 동일한 귀속적 특징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높은 수준의 신뢰에 도달하게 된다. 제도근거 (institutionally-based) 신뢰는 공식적인 제도나 조직에 의해서 제공되는 신뢰 유형으로, 예를 들어 학력을 보증하는 출신학교, 자격증 제도, 법적 보증제도 등에 근거해서 형성된다(권혁상 외 2003; 류태건 2020).

다음으로 신뢰의 대상을 기준으로 신뢰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뉴튼(Newton 2009, 344-345)의 3가지 종류의 분류체계가 있다. 먼저, 사회적 신뢰(social trust)와 정치적 신뢰(political trust)의 분류로 이는 수평적 신뢰와 수직적 신뢰로 불리기도 한다. 즉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인 사회적 신뢰와 정부나 정치인 등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의미한다. 이 분류는 특히 정치사회학에서 정치의 사회적 기반을 개념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도입된다. 다음으로는 대인신뢰(trust in people)와 제도신뢰(trust in institutions)의 분류로서, 사람에 대한 대인신뢰와 제도적 기관이나 집단, 절차나 규범 혹은 체제에 대한 제도

신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특수신뢰(두터운 혹은 구체적 신뢰)와 일반신뢰(얇은 혹은 추상적인 신뢰)의 분류이다. 특수신뢰는 개인들의 사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에 근거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고, 일반신뢰란 좀 더 일반적인 정보에 근거한 타인들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뉴튼이 거론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분류체계를 종합하여 활용되고 있는데, 즉 신뢰의 유형은 대인신뢰와 제도신뢰로 대분류되고, 대인신뢰는 특수신뢰와 일반신뢰로 중분류 될 수 있다. 다만 제도신뢰는 일정한 중분류체계가 없이 신뢰대상에 따라 기관신뢰, 정부신뢰, 체제(체계)신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차재권·류태건 2017; 류태건 2020).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정치신뢰와 제도(기관)신뢰 또한 사회자본의 유형이다. 류태건(2012)은 정치신뢰에 대해 “신뢰주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적 대상의 어떤 특성이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심리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치신뢰는 시민들이 정치적 행위자 또는 제도를 통해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이라는 점에서(Hetherington 2005, 9), 향후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정치적 지지와도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Jamal and Nooruddin 2010; Yap 2019). 현재 정권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일 경우 그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이재현 2020, 7 재인용).

제도(기관)신뢰는 정부의 제도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제도적 측면의 제도(기관)신뢰는 정부가 행정적 제도(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를 운영함으로써 형성하게 되는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정성을 기반으로 중립적인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형성되는 신뢰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측면의 제도(기관)신뢰는 정치적 당파성을 지닌 정치적 제도(국회, 정당 등)에 대한 신뢰로, 당파성에 기반한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지지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정권의 지지와 관련이 있다(이재현 2020).

3)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 선행연구자들의 대체적인 관점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를 원인으로 신뢰를 그 결과로 보는 인과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콜만(Coleman 1988)은 사회구조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폐쇄성이 신뢰나 규범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폐쇄적인 사회구조나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구성원들이 연합하여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어 효과적인 사회 규범을 형성하게 한다. 또한 네트워크의 폐쇄성은 구성원들의 의무감과 평판에 바탕한 사회적 신뢰의 형성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방적인 상황에서는 사회적 평판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또한 그 사람에 한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폐쇄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라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좋지 않은 평판이 형성되고 나아가 집합적 제재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무 이행에 더욱 구속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차재권·류태건 2017). 앞에서 상술했듯이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는 유대의 강도를 기준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로 구분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강한 유대를 통해 사람들은 동질적인 결속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동질감을 바탕으로 한 결속집단은 작고 폐쇄된 사회적 단위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구성원들 간 높은 수준의 소속감, 상호 신뢰감, 협동관계 등을 형성한다. 반면 약한 유대는 다양한 사람 또는 결속집단 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데, 약한 유대관계를 많이 형성할수록 개인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어 상황적응에 유리하다(차재권·류태건 2017). 또한 퍼트남(Putnam 2000 19-23, 135-137)은 사회자본을 결속형(bonding)과 교량형(bridging)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있다. 결속형은 사회적 배경이 유사한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로 질적으로 밀접하고 강한 유대관계, 즉 두터운 신뢰를 강화하는 반면, 교량형은 사회적 배경 등이 다르고 일시적인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로 얇은 신뢰를 형성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차재권 외(2007)의 연구에서는 약한 네트워크의 대표적 형태를 자원결사체(자발적 결사체 voluntary association)로 보고 있다. 자원결사체의 형태와 특성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구관계와 같은 강한 네트워크가 아닌 지인 사이의 약한 네트워크를 가진다. 따라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사회구조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호혜성에 기반한 협력은 창출되며, 그러한 협력은 신뢰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상호작용을 통해 의무감과 기대에 기반한 호혜성을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가 증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한 네트워크와 약한 네트워크는 신뢰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3.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 관계의 변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각 국가별로 정부의 역량과 대처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신속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검사와 격리조치 시행, 확진자 경로 공개, 마스크 5부제 시행 등을 통한 정부의 능동적인 방역체계와 함께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 동참 및 높은 시민 의식으로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며 코로나19 팬데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범 국가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효성(2020)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유튜브의 정보추구 이용동기와 뉴스 및 시사 콘텐츠 이용이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논문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한 대통령 책임 인식 여부에 따라 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투표 선택 또한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2016, 11)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재난은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세월호 사고와 같은 외부적 충격은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에 대한 일체감의 변화는 지지정당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연구를 실시했던 시점에 따른 분석 결과로는 경기도민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실제 지지정당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재난에 대한 책임은 60% 이상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당의 과실정도에 있어서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과실이 조금 더 큰 것으로 조사되어 의원수가 많은 당의 책임이 큰 것으로 인식되었다.

세월호 사고,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은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권과 정당, 정치신뢰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와 크기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강한 네트워크’와 ‘약한 네트워크’로 나누어 사회적 네트워크가 정치신뢰와 제도(기관)신뢰를 약화시키거나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다.

Ⅲ. 변수, 가설, 분석방법

1. 변수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게 되는 실증분석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기에 독립적으로 수행된 두 변의 여론조사 데이터에 바탕을 두어 진행되었다. 먼저 2019년의 데이터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한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³⁾ 2020년의 데이터는 <2.28 기념 코로나19 대유행과 민주주의 시민의식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되었다.⁴⁾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수는 <표-1>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는 정치신뢰와 제도(기관)신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류태건의 연구(2012)에서는 정치 신뢰에 대해 ‘신뢰주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적 대상의 어떤 특성이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심리상태’로 정의하여 특정기관이 아닌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통해 측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정희옥과 윤종빈, 김진주(2014)의 연구는 ‘정치는 일반 국민들과 무관하게 소수 정치인에 의해 좌우된다’를 정치신뢰에 대한 측정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상술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치 체제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묻는 문항을 통해 정치신뢰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2019년의 조사에서는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⑤ 매우 동의한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숫자가 커질수록 정치적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 2020년의 경우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주기 어렵다’로 구성된 문항을 정치신뢰에 대한 측정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① 매우 공감한다’에서부터 ‘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숫자가 낮아질수록 정치적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분석을 위한 코딩 과정에서는 이를 역순으로 변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로 제도(기관)에 대한 신뢰는 직접적으로 기관의 명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선행된 연구(금희조·조재호 2015; 금종예·임현정 2019; 이재현 2020; 하상웅·길정아 2020)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방법이다.

먼저 2019년의 조사에서는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라는 문항을 제도적 신뢰의 측정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① 전혀 믿지 않는다’에서부터 ‘④ 매우 믿는다’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제

3)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BaseView.do?jsessionid=CFE4286066F468083087CF690F9D0A3A?seSubCode=BIZ017A001&seqNo=BASE_0000000000000560 (검색일: 2020년 11월 5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4) 2.28 기념 코로나19 대유행과 민주주의 시민의식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는 (사)한국정치학회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2020년 10월 20일~30일 ㈜엠브레인이 보유한 온라인 패널에 대해 무작위 할당 표집방식을 적용하여 추출한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도적 신뢰가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문항에서 질문한 기관 가운데 정치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관은 ‘중앙정부 부처’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로 이들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020년 조사의 경우 ‘00님께서는 다음 기관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도적 신뢰의 측정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①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에서부터 ‘⑤ 매우 신뢰한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제도적 신뢰가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선행된 2019년과 2020년 문항의 척도 점수가 상이한바 이를 조절하기 위해 2020년의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환산하여(①→1, ②→1.75, ③→2.5, ④→3.25, ⑤→4)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문항에서 질문한 기관 가운데 정치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관은 ‘청와대’와 ‘중앙 행정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 ‘정당’으로 이들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표-1> 연구 변수 정리

		2019	2020
종속	정치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주기 어렵다.
	기관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 중앙정부 부처/국회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청)	00님께서는 다음 기관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청와대/중앙 행정부처 /국회/지방자치단체/정당
코로나		-	00님께서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네트 워크 측정	강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약	귀하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 -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00님께서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과 접촉하십니까?
독립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자가 거주, 주관적 계층 의식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자가 거주, 주관적 계층 의식

2) 독립변수

본 연구에 사용되는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과 연령, 학력, 자가거주 여부이다. 이러한 특성은 선행된 정회옥 등(2014)의 연구에서 착안하여 통제변수의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다만 주관적 계층 의식의 경우 2019년은 오름차순으로 문항이 배열되었지만, 2020년의 경우 내림차순으로 문항이 배열되었다. 이를 맞추기 위해 2020년의 응답에 대해 일괄적으로 -1을 곱한 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또 자가거주 여부의 경우 응답항목의 정의가 상이하여 자가 소유 혹은 거주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변환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독립변수군은 응답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강도에 따른 정치적 신뢰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설정한 변수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류태건 2014; 류태건·차재권 2017)은 통해 네트워크 형성 강도에 따라 정치참여나 기관에 대한 신뢰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약한 유대관계는 정보 획득에, 강한 유대 관계는 신뢰나 호혜성 등 사회규범을 생성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볼 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네트워크의 강도에 따라 정치적 신뢰 역시 변화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변수로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는 ‘강한 네트워크’와 ‘약한 네트워크’로 나뉜다. 류태건(2014)의 연구에서 강한 네트워크의 측정을 잘 알고 지내는 친구나 동료, 이웃의 수로 측정하였으며, 약한 네트워크의 경우 수첩이나 휴대폰 등에 보관중인 사람들의 전화번호의 수로 측정을 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사용한 설문에서는 상술한 내용의 문항이 없는바 유사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먼저 2019년 조사에서 ‘강한 네트워크’의 측정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란 문항의 응답(없다/1~2명/3~4명/5~9명/10명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이어 ‘약한 네트워크’는 ‘귀하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사람들과 접촉하십니까? -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이란 문항의 응답(없다/1~2명/3~4명/5~9명/10~19명/20~49명/50명 이상) 통해 측정하였다.

2020년 조사의 경우 ‘강한 네트워크’의 측정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란 문항의 응답(없음/1~3명/4~6명/7~9명/10~12명/13~15명/16~18명/19~21명/22명 이상)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어 ‘약한 네트워크’의 경우 ‘00님께서는 평일 하루에 보통 몇 명의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과 접촉하십니까?’라는 문항의 응답(없다/1~2명/3~4명/5~9명/10명 이상)을 통해 측정하였다. 상술한 네트워크 형성 강도의 경우 측정 년도와 상관없이 변수의 값이 높을수록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로나의 영향 변수이다. 코로나 영향 변수는 2020년 조사에서 시행된 ‘00님께서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의 응답(① 매우 많이, ② 많이, ③ 보통, ④ 적게, ⑤ 아주 적게)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변수의 값이 작을수록 코로나19에 따른 개인의 삶 변화는 적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가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사회적 자본과 신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앞선 II장에서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 간의 이론적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의 조사에서 정치와 기관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였을 것이다.

가설-2: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할수록 정치와 기관에 대한 신뢰 또한 약해졌을 것이다.

가설-3: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수록 정치와 기관에 대한 신뢰

역시 낮아졌을 것이다.

먼저 가설-1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과 발생 이후인 2020년 사이의 정치와 기관에 대한 신뢰 비교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자본의 저하 여부를 밝히기 위한 가설이다.

이어 가설-2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정치와 기관에 대한 신뢰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가설이다.

마지막으로 가설-3은 코로나19에 따른 삶의 질 저하 강도가 정부와 기관에 대한 신뢰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가설이다.

3. 분석방법

상술한 가설과 변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T-test와 ANOVA 분석,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평균비교를 통해 시기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도,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정치와 기관의 신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사회적 네트워크와 코로나19의 영향이 정치 및 기관의 신뢰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 모형은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text{정치 및 기관 신뢰}_i = & \alpha_i + \beta_1 \text{강한 네트워크 형성 정도}_i + \beta_2 \text{약한 네트워크 형성 정도}_i + \\ & \beta_3 \text{성별}_i \\ & + \beta_4 \text{연령}_i + \beta_5 \text{학력}_i + \beta_6 \text{소득}_i + \beta_7 \text{자가거주 여부}_i + \beta_8 \text{주관적} \\ & \text{계층 의식}_i \\ & + \beta_9 \text{코로나19 영향 정도}_i + \varepsilon_i \end{aligned}$$

(i = 2019년, 2020년)

회귀분석은 대상 연도와 코로나 영향 변수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3가지 모형으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이는 <표-2>와 같다. 먼저 2019년과 2020년 상술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모형으로 코로나19의 발생 전후를 비교를 위한 모형이다. 이어 2020년 X 코로나 모형의 경우 2020년 모형에 코로나 관련 변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코로나 변수가 정치 및 기관의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표-2> 모형별 변수 정리

	2019년	2020년	2020년 X 코로나
종속	O	O	O
독립	O	O	O
코로나	-	X	O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표-3>은 2019년 모형의 기술통계량이다. 전반적으로 정치 신뢰는 기관에 신뢰보다 높게 나타난 특성을 보였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국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표-3> 2019년 모형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치신뢰	8000	1	5	3.19	1.012
기관신뢰 - 중앙정부 부처	8000	1	4	2.26	.713
기관신뢰 - 국회	8000	1	4	1.83	.753
기관신뢰 - 지방자치단체	8000	1	4	2.35	.743
약한 네트워크	8000	1	7	3.01	1.049
강한 네트워크	8000	1	5	2.41	.769
성별	8000	1	2	1.50	.500
연령	8000	1	5	2.99	1.365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8000	0	10	5.30	1.562
학력	8000	1	4	3.37	.759
자가거주	8000	0	1	.66	.473
소득	8000	1	7	4.75	1.752
유효수 (목록별)	8000				

반면 2020년의 경우 정치신뢰는 기관 신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국회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난 점은 특기할만하다. 또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2020년 모형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정치신뢰	1315	1	5	3.47	.991
기관신뢰 - 청와대	1315	1	4	2.42	.853
기관신뢰 - 중앙 행정부처	1315	1	4	2.38	.737
기관신뢰 - 국회	1315	1	4	1.82	.668
기관신뢰 - 지방자치단체	1315	1	4	2.26	.646
기관신뢰 - 정당	1315	1	4	1.91	.635
약한 네트워크	1315	1	5	2.64	1.234
강한 네트워크	1315	1	9	2.68	1.244
성별	1315	1	2	1.49	.500
연령	1315	1	5	3.05	1.367
주관적 계층	1315	-6	-1	-3.91	.859

학력	1315	1	5	3.58	.926
자가거주	1315	0	1	.80	.397
소득	1315	1	8	5.02	1.992
코로나 영향	1315	1	5	1.99	.814
유효수 (목록별)	1315				

2. 평균비교

1) 2019년 X 2020년 비교

<표-5>는 2019년과 2020년의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의 평균 비교 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먼저 국회에 대한 신뢰의 경우 t값이 -0.351을 기록하였으나 유의확율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 의미를 가지는 차이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2019년에 이미 국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정치에 대한 신뢰의 경우 t값은 9.137을 기록하였으며, p값은 .000을 기록하여 통계적 의미를 가지는 평균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의 경우 t값은 5.626을 기록하였으며, p값은 .000을 기록하여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2.3802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2.2603을 기록하며 신뢰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 전후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1에 부합하는 결과로 코로나19가 정치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석결과는 앞선 정치와 중앙정부에 대한 평균 비교 분석과는 차이를 보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는 t값이 -4.189를 기록하였으며, p값은 .000을 기록하여 통계적 의미를 가지는 차이를 보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의 평균 값은 2019년에는 2.2639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2.3463을 기록하여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재난 지원금 등 자치단체에서의 선제적인 조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된다.

<표-5> 2019년 X 2020년 평균 비교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2019	2020	2019	2020		
정치	3.4692	3.1949	.99063	1.01194	9.137	.000
중앙정부	2.3802	2.2603	0.73747	0.71315	5.626	.000
국회	1.8241	1.8313	0.66761	0.75256	-0.351	.726
지방자치단체	2.2639	2.3463	0.64627	0.74309	-4.189	.000

2) 코로나 영향별 비교

<표-6>는 코로나19가 삶에 미친 영향의 차이가 정치와 기관 신뢰에 영향을 미쳤는지

평균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정치신뢰와 청와대에 대한 기관 신뢰는 유의확률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 의미를 가지는 차이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 행정부처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정당에 대한 기관 신뢰의 경우 유의확률이 낮게 나타나 통계적 의미를 가지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앙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인의 삶에 영향을 덜 미칠수록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회와 정당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에 비해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응답이 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결과는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인 ‘코로나19에 대한 삶의 질 저하가 클수록 정치와 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가 컸을 것이다’에 부합하는 결과로 코로나19에 따른 기관 신뢰의 저하가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가설-3은 채택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특기할 점은 일부 문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삶의 질 저하에 대해 ‘아주 적게’라 응답자의 기관 신뢰가 더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주 적게’라는 응답치 자체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결과 값이 왜곡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표-6> 2020년 X 코로나 영향 평균 비교 분석 결과

종속변수	코로나 영향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증결과
정치신뢰	매우 많이(a)	3.56	1.075	1.491/.203	-
	많이(b)	3.46	.953		
	보통(c)	3.39	.952		
	적게(d)	3.38	.890		
	아주 적게(e)	3.47	1.581		
기관신뢰 - 청와대	매우 많이(a)	2.32	.886	1.894/.109	-
	많이(b)	2.46	.852		
	보통(c)	2.42	.801		
	적게(d)	2.45	.853		
	아주 적게(e)	2.80	.855		
기관신뢰 - 중앙 행정부처	매우 많이(a)	2.27	.779	3.372/.009***	d>c>b>a>e (lsd)
	많이(b)	2.41	.724		
	보통(c)	2.45	.690		
	적게(d)	2.50	.742		
	아주 적게(e)	2.20	.855		
기관신뢰 - 국회	매우 많이(a)	1.74	.667	4.115/.003***	c>a (Tamhane의 T2)
	많이(b)	1.82	.658		
	보통(c)	1.94	.669		
	적게(d)	1.95	.705		
	아주 적게(e)	1.60	.627		
기관신뢰 - 지방자치단체	매우 많이(a)	2.12	.717	7.297/.000***	d>c>e>b>a (lsd)

	많이(b)	2.29	.624		
	보통(c)	2.37	.563		
	적게(d)	2.39	.619		
	아주 적게(e)	2.35	.335		
	매우 많이(a)	1.81	.651		
기관신뢰 - 정당	많이(b)	1.91	.619	5.300/.000 ***	c>a, b (Tamhane의 T2)
	보통(c)	2.03	.612		
	적게(d)	2.05	.705		
	아주 적게(e)	2.05	.671		

*:p<0.1, **:p<0.05, ***p<0.01

3) 회귀분석

<표-7>는 2019년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먼저 정치적 신뢰에 대해 연령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계층과 학력, 소득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행정부처의 신뢰의 경우 강한 네트워크 형성 강도와 소득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주관적 계층과 학력의 경우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국회의 신뢰는 약한 네트워크와 강한 네트워크 형성 강도, 연령, 자가 거주 여부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주관적 계층과 학력은 유의수준 1%에서, 성별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강한 네트워크의 강도가 유의수준 5%에서, 소득이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주관적 계층은 유의수준 1%에서, 성별과 연령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2019년의 모형의 분석을 정리하면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정치나 기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계수의 방향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본 연구와 관련된 변수인 네트워크의 형성의 경우 형성 강도가 강할수록 정치나 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7> 2019년 모형 회귀분석 결과

	정치	중앙 행정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
(상수)	3.794*** (.096)	2.125*** (.068)	1.648*** (.071)	2.214*** (.071)
약한 네트워크	.005 (.011)	.008 (.008)	-.042*** (.008)	.013 (.008)
강한 네트워크	-.002 (.015)	-.040*** (.011)	-.035*** (.011)	-.021* (.011)
성별	-3.834E-05 (.023)	.014 (.016)	.038** (.017)	.040** (.017)

연령	.025*** (.009)	-.010 (.007)	-.021*** (.007)	.017** (.007)
주관적 계층	-.073*** (.007)	.025*** (.005)	.039*** (.006)	.016*** (.005)
학력	-.050*** (.018)	.050*** (.013)	.041*** (.013)	.008 (.013)
자가 거주 여부	-.011 (.025)	.021 (.018)	-.052*** (.019)	.013 (.019)
소득	-.026*** (.007)	-.021*** (.005)	.018*** (.005)	-.018*** (.005)
R ²	.024	.008	.021	.005
Adjusted R ²	.023	.007	.020	.004
Durbin-Watson	1.446	1.321	1.296	1.462
N	8000			

괄호 안의 수는 표준오차. *:p<0.1, **:p<0.05, ***p<0.01

<표-8>는 2020년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먼저 정치적 신뢰의 경우 강한 네트워크의 강도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주관적 계층과 학력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에 대한 신뢰는 성별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주관적 계층이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가 거주 여부의 경우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중앙행정부처의 신뢰의 경우 성별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강한 네트워크의 강도와 주관적 계층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대한 신뢰의 경우 강한 네트워크의 강도와 성별, 주관적 계층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과 소득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학력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는 강한 네트워크의 강도와 성별이 유의수준 1%에서, 연령과 주관적 계층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소득의 경우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정당에 대한 신뢰는 강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성별, 주관적 계층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 학력과 소득의 경우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술한 결과를 정리하면 성별과 주관적 계층은 정치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향을 보였지만 기관에 신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과 연령, 소득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된 변수인 네트워크의 형성의 경우 약한 네트워크의 형성 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강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형성 강도가 강할수록 정치에 대한 신뢰는 부정적인 영향을, 기관에 대한 신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네트워크 형성 강도가 강할수록 신뢰가 떨어진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 강한 네트워크 형성 강도가

클수록 기관에 대한 신뢰가 유지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인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한 사람일수록 정치와 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가 컸을 것이다’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약한 네트워크의 강도가 통계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정치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네트워크 강도가 강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가설-2는 제한적으로 채택된다고 볼 수 있다.

<표-8> 2020년 모형 회귀분석 결과

	정치	청와대	중앙 행정부처	국회	지방자 치단체	정당
(상수)	3.083*** (.270)	2.462*** (.237)	2.406*** (.204)	2.327*** (.179)	2.261*** (.178)	2.222*** (.172)
약한 네트워크	-.021 (.023)	-.009 (.020)	-.014 (.017)	-.007 (.015)	-.002 (.015)	.017 (.014)
강한 네트워크	-.056** (.023)	.000 (.020)	.034** (.017)	.087*** (.015)	.054*** (.015)	.073*** (.014)
성별	-.004 (.054)	.190*** (.048)	.129*** (.041)	.173*** (.036)	.097*** (.036)	.145*** (.035)
연령	.007 (.020)	-.010 (.017)	.011 (.015)	-.052*** (.013)	.031** (.031)	-.016 (.013)
주관적 계층	-.197*** (.037)	.056* (.032)	.068** (.028)	.128*** (.024)	.063** (.024)	.109*** (.023)
학력	-.083*** (.031)	.023 (.027)	.030 (.023)	-.048** (.020)	-.003 (.020)	-.056*** (.020)
자가 거주 여부	.049 (.070)	-.102* (.061)	-.075 (.053)	.029 (.046)	-.034 (.046)	.053 (.044)
소득	.012 (.015)	-.018 (.014)	-.018 (.012)	-.034*** (.010)	-.019* (.010)	-.027*** (.010)
R ²	.051	.017	.018	.081	.026	.064
Adjusted R ²	.045	.011	.012	.075	.020	.058
Durbin-Watson	2.138	1.995	2.013	1.968	1.946	1.932
N	1315					

괄호 안의 수는 표준오차. *:p<0.1, **:p<0.05, ***p<0.01

<표-9>는 2020년 모형에 코로나 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먼저 정치에 대한 신뢰는 주관적 계층과 학력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강한 네트워크와 코로나 영향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신뢰의 경우 청와대에 대한 신뢰는 성별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코로나 영향을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주관적 계층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자가 거주 여부의 경우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앙 행정부처에 대한 신뢰의 경우 성별과 코로나 영향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주관적 계층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강한 네트워크의 형성 강도가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대한 신뢰는 강한 네트워크의 형성 강도와 성별, 주관적 계층, 코로나 영향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연령과 소득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학력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는 강한 네트워크와 성별, 코로나 영향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주관적 계층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의 경우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정당의 경우 강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성별, 주관적 계층, 코로나 영향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력과 소득은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연령은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결과를 정리하면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정치나 기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기할 점은 주관적 계층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에 대한 신뢰와 기관에 대한 신뢰의 계수 방향이 반대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가설과 관련된 코로나의 영향은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수록 기관에 대한 신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코로나 19에 대한 삶의 질 저하가 클수록 정치와 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가 컸을 것이다’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일관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정치 신뢰에는 이와는 반대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가설-3은 제한적으로 채택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9> 2020년 모형 코로나 포함 회귀분석 결과

	정치	청와대	중앙 행정부처	국회	지방자 치단체	정당
(상수)	3.239*** (.279)	2.325*** (.244)	2.238*** (.211)	2.135*** (.184)	2.050*** (.183)	2.020*** (.176)
약한 네트워크	-.022 (.023)	-.088 (.020)	-.013 (.017)	-.005 (.015)	-.011 (.015)	.019 (.014)
강한 네트워크	-.053** (-.053)	-.002 (.020)	.031* (.017)	.084*** (.015)	.051*** (.015)	.070*** (.014)
성별	-.012 (.054)	.197*** (.048)	.138*** (.041)	.183*** (.036)	.108*** (.036)	.156*** (.034)
연령	.015 (.020)	-.016 (.018)	.003 (.015)	-.061*** (.013)	.021 (.013)	-.026** (.013)
주관적 계층	-.194*** (.037)	.053* (.032)	.064** (.028)	.123*** (.024)	.058** (.024)	.105*** (.023)
학력	-.086*** (.031)	.035 (.027)	.034 (.023)	-.044** (.020)	.001 (.020)	-.052*** (.019)
자가 거주 여부	.050 (.070)	-.103* (.061)	-.076 (.053)	.027 (.046)	-.036 (.046)	.051 (.044)
소득	.012 (.015)	-.018 (.175)	-.018 (.012)	-.034*** (.010)	-.019* (.010)	-.027*** (.010)
코로나 영향	-.075** (.033)	.065** (.029)	.081*** (.025)	.092*** (.022)	.101*** (.022)	.096*** (.021)
R ²	.055	.020	.025	.093	.042	.079
Adjusted R ²	.048	.014	.018	.087	.035	.072
Durbin-Watson	2.136	1.989	2.006	1.957	1.946	1.938
N	1315					

괄호 안의 수는 표준오차. *:p<0.1, **:p<0.05, ***p<0.01

V.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요소인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 간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난 상황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약화로 이어져 결국에는 정치나 기관(제도)에 대한 신뢰의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에 바탕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후인 2019년과 2020년 사이 정치에 대한 신뢰와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대한 신뢰를 t-test라는 비교적 간단한 통계분석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국회에 대한 신뢰는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신뢰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재난적 상황에서 정치

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여론조사와 차이를 보인다. 한국리서치가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상황인식에서 정부 대응의 평가는 대구 지역의 광범위한 유행이 진행된 2월 말 이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크게 앞서고 있다.⁵⁾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대처와는 별개로 사회적 결속이 느슨해짐에 따라 신뢰가 저하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회라는 기관의 정치적 존재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의 사회통합 실태 조사에서도 국회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⁶⁾ 이러한 경향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신뢰 수준이 낮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가하지도 않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수준의 증가이다. 본 연구의 가설설정 단계에서는 정치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술하였던 한국리서치의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청와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⁷⁾ 다만 존재감이 없던 과거에 비해 코로나 사태 국면에서 자치단체장의 언론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고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응 등이 주목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강도가 정치와 기관에 대한 신뢰에 미친 영향 역시 변화를 보였다. 2019년 모형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종류에 관계 없이 강도가 강할수록 정치와 기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2020년 모형에서는 코로나 변수의 통제 여부와 관계없이 약한 네트워크의 강도는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진 못하였다. 반면 강한 네트워크는 강도가 강할수록 정치적 신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관에 대한 신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강한 네트워크가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는 선행연구(류태진·차재권 2017)와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는 보수주의 혹은 준봉정신이 강한 네트워크가 큰 사람에게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강한 네트워크는 위기 속에서 이러한 특성을 강화하여 기관에 대한 신뢰를 유지 혹은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기할 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던 약한 네트워크의 특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영향력을 잃었다는 점이다. 이는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기존의 약했던 네트워크의 결속력이 더욱 약화되어 영향력을 잃게 만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삶의 질 저하가 정부와 기관에 대한 신뢰 변화에 미친 영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많을수록 중앙 행정부처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정당에 신뢰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자본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그 영향의 정도에 따라 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술한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는 한국에서 정치와 기관(제도)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2019년과 2020년 사이 다양한 정치적 사건 등 외생적 요인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 시기 사이에 총선이 있었다는

5) 이소연, 2020.10.27. '[코로나19] 18차 인식조사(상황 인식, 마스크 착용 행태 등)' <https://hrcopinion.co.kr/archives/16736>, 검색일: 2020년 11월 7일

6) 2017년 1.7, 2018년 1.8, 2019년 1.9

7) 한국리서치 18차 조사 기준 청와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5%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6%를 기록하였다.

점에서 국회나 정당에 대한 신뢰는 코로나 이외의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인 측면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정치와 기관에 대한 신뢰에 대해 여러 변수들이 미친 영향의 예측 방향이 달랐다는 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추가적인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기도의회. 2016. “재난 경험이 지지정당에 미치는 영향-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 학학회. 새누리당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권혁상·주효진·도운섭. 2003. “사회자본과 신뢰의 개념 및 유형화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8-52.
-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63-95.
- 김용학·김영진. 2016.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 류태건. 2020. 『6개 광역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사회자본 비교연구』. 세종출판사.
- _____. 2016.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치신뢰 변화. 21세기정치학회보, 26(1), 1-28
- _____. 2014.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와 강도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효과. 21세기정치학회보, 24(2), 3-28
- 유계숙·주수산·김종우.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기혼 성인 남녀의 스트레스 경험: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6(3):5-32.
- 이재현. 2020. “신뢰는 정치참여를 촉진하는가?: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신뢰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3(2), 317-347.
- 이효성. 2020. “유튜브의 정보추구 동기 및 이용이 투표선택 의도에 미친 영향: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통령 책임 변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58:183-222.
- 정희옥, 윤종빈, 김진주. 2014. 한국 유권자의 정치신뢰를 결정하는 요인. 21세기정치학회보, 24(3), 415-430
- 차재권·류태건. 2017. “사회적 네트워크의 신뢰에 대한 영향분석-사회자본론의 관점에서.” 『21세기정치학회보』 27(2), 51-80.
- 최윤식. 2020. 『빅체인지-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 김영사.
- 하상웅, 길정아 (2020). 유권자의 정치 관심은 언제나 바람직한가? : 정부 신뢰의 이념 편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4(2), 31-57.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John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_____.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 England: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Emirbayer, Mustafa & Jeff Goodwin. 1994. "Network Analysis, Culture, and the Problem of Ag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6): 1411-1454.
- Giddens, Anthony.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Kanupriya. 2020. "COVID-19: A Socio-economic perspective." *FIIB Business Review*, 9(3):161-166.
- Luhmann, Niklas. 1979. *Trust and Power*.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709-734.
-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 1-24.
- Putnam, R. D. 1993a. *Mar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청시 외 역.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2000.)
- _____.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정승현 역. 『나 홀로 볼링』. 페이퍼로드. 2009.)
- Scott, John. 2000.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London: Sage.
- Rousseau, Denise M., Sim B. Sitkin, Ronard S. Burt and Colin Camerer.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3, No.3. 393-404.
- Woolcock, Michael.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151-208.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WHO director-general's opinion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 <http://www.who.int/dg/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 (검색일: 2020.11.02.)
- Zucker, L.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53-111.

‘코로나 19 팬데믹이 가져 온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의 관계 변화 연구 : 정치 및 기관 신뢰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재현(부경대학교)

- 코로나19 팬데믹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만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언택트’라는 비대면 상황에서 정치신뢰와 기관(제도)신뢰를 중심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시사하는 바가 큰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 연구의 제목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의 관계 변화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설설정이나 변수 선정 및 측정, 그리고 분석방법(모형설정)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수 선정과 측정의 문제

- 통제변수에 자가거주 여부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연구자께서 정희옥 외(2014)의 연구에 착안하였다고 언급하였지만, 통상 사회경제적지위(SES) 변수에 소득과 자산, 주관적 계층인식 등을 활용하는게 일반적인데, 이 연구는 자가거주 여부를 사용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산(asset)이 보다 통제변수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연구에 사용한 서베이 자료에 자산을 측정한 문항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자산 변수보다 시사하는 특징이 있어서 인지를 설명하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자가 거주 여부가 현재 사는 곳이 자가인가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직장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자가 주택은 다른 지역에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 사는 곳은 자가가 아닌 전세/월세와 같은 형태인지 설문문항에서 어떻게 측정하였는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 이 연구의 종속변수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측정한 문항은 일반적으로 정치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정희옥 외(2014) 연구에서 사용한 정치신뢰 측정변수 사용한 전례를 언급했지만, 그들의 연구를 확인한 결과 419페이지에 <정치효능감은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정치신뢰 관련 종속변수 문항들(2019년, 2020년)은 정치신뢰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효능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정치효능감 중에서 외적 정치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예를 들어,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에서는 “정부가 나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신경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I don't think the government cares much what people like me think)”라는 문항과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력이 없다(people like me don't have any say about what people government does)”라는 문항으로 “외적 정치효능감”을 측정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다수의 연구자들(Wu 2003; Karp and Banducci 2008; Merolla 2013 et al.; 송용훈·정문기 2018)이 그 문항을 외적 정치효능감으로 특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¹⁾

- 따라서 종속변수 중에서 정치신뢰 변수를 정치효능감으로 대체하거나, (정치적 제도를 포함한) 기관신뢰 변수가 이미 있으니, 서베이 문항에 혹시 대인신뢰 변수가 있다면 대인신뢰 변수 등의 새로운 변수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논문에서 가설설정 부분의 위치 문제

- 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어떠한 research gap이 있는지, 그것을 이 연구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내용과 함께 3장 2절(12페이지)에 제시한 가설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 가설 1의 경우, 조사한 기관이 상이하고 질문 내용이 미묘하게 다른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과 2020년을 가설설정까지 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기관(제도) 신뢰는 정부 > 의회, 정당 > 정치인 순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시기별로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기관이 정기적으로 측정한 정치/기관(제도) 신뢰 자료가 있다면 그 추세를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금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논문의 지면(紙面) 문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t-test와 ANOVA를 하지 않고 회귀분석으로 분석과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3) 분석방법(모형 설정)에 대한 제안

- 2020년도 자료만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변수가 신뢰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형은 ①기본모형(사회경제적지위 모형)에 ②사회적 네트워크를 추가한 모형, 그리고 ③코로나19를 추가한 모형 이렇게 총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모형은 세 번째 코로나19 모형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년도 비교에 측정문항의 척도가 상이함을 단순비교하는데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른 한편으로,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분석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을

1) Wu, Chung-Li. 2003. "Psycho-Political Correlates of Political Efficacy: The Case of the 1994 New Orleans Mayoral Election." *Journals of Black Studies* 33(6): 729-760.; Karp, Jeffrey and Susan Banducci. 2008. "Political Efficacy and Participation in Twenty-Seven Democracies: How Electoral Systems Shape Political Behavio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 311-334.; Merolla, Jennifer, Abbylin Sellers and Derek Fowler. 2013. "Descriptive Representation, Political Efficacy, and African Americans in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Political Psychology* 34(6): 863-873.; 송용훈·정문기. 2018. "정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의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 장수마을과 산새마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0(3):553-576.

것입니다. 예를 들어, AMOS를 활용한 매개분석 또는 조절효과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구조방정식 모형(SEM)으로 관계를 검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필요하다면, 각 측정문항들(기관신뢰 문항 3개, 네트워크 2개 등)을 요인분석으로 구분되고 묶이는지를 확인해서 묶이는 문항들을 하나의 변수로 축약해서 분석하면 논문의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다른 신뢰요인들을 더하여 요인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도(기관)신뢰이외에 대인신뢰와 같은 문항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인분석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요인들을 묶어서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신뢰도가 통계분석상 가능한 값이 나온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회귀분석에서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관계를 간략하게 확인하는 동시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분석 표에 VIF 측정값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각주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그 밖에 제안 사항들

- 2페이지 첫 문단에 “이러한 관점은 버트(Ronald Burt), 린(Nan Lin), 포르테스(Alejandro Portes)와 같은 사회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Grootaert et al. 2004; 류태건 2020, 17 재인용).”라고 한 부분은 이 연구의 흐름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사회자본이 어떤 연구자에게 계승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여러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바를 특징적으로 구분하거나 이 연구에서 종합정리하는 차원으로 서론 파트가 아닌 2장 부분에서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5장 결론 부분 23페이지에 “코로나19에 따른 삶의 질 저하가 정부와 기관에 대한 신뢰 변화에 미친 영향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삶의 질’을 측정한 문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한 문항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삶의 질 저하로 판단하고 15~16페이지 분석과 5장 결론 부분에 기술 또는 주장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발표 2]

코로나 19와 한국의 민주주의:
COVID-19 Before and After

2020. 12. 22.

송 경 재
(경희대)

코로나 19와 한국의 민주주의: COVID-19 Before and After

송경재(경희대학교)

I. 서론

코로나 19(COVID-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2020년 전 세계는 이른바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lockdown)와 완화, 그리고 방역, 감염이 일상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는 과거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에 필적할 만하다는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20세기 최대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 독감은 2018년 발생 이후 불과 2년 만에 5억 명을 감염시키고, 1억 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감염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 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Johns Hopkins Center for Systems Science and Engineering)는 11월 23일 기준 감염자가 191개국에서 58,570,555명, 사망자는 1,386,596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한국도 같은 기간 감염자 수는 31,000명, 사망자 수도 500명을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무자각 감염자를 더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다. (<https://www.arcgis.com/apps/opsdashboard/index.html#/bda7594740fd40299423467b48e9ecf6> 검색일: 2020년 11월 24일).

코로나 19의 영향은 단순히 생명과 질병의 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활방식과 사회생활, 삶을 근저에서부터 바꾸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 버리는 코로나 19 발(發)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코로나 19로 뉴노멀은 경제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무엇보다 경제·사회적 변화는 극적이다. 면대면(face to face)이 중심이던 오프라인 사회관계가 비대면, 언택트(untact)로 전환했고, 회사, 학교, 공공기관, 은행, 쇼핑 등 사회생활은 온라인 비대면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는 일상이 되고 있으며, 온라인 배달과 주문, 금융 등 비대면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 면대면에 의존했던 경제구조가 국경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세계 경제에 장기적으로 구조적 저성장을 일으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정채진·박석중·이광수·김한진·김일구 2020).

현실 정치 역시 코로나 19의 블랙홀에 빠져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 정치 일정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통적 정치과정에서 일상처럼 진행되었던 정치 행위가 코로나 19 방역 상황에 맞는 새로운 기준으로 변화했다. 여러 나라에서 선거나 정당, 시민단체, 미디어 등 정치활동은 비대면, 방역과 결합하여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다. 감염병이 전통적 정치의 영역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4월에 치러진 한국의 21대 총선은 비대면 선거 캠페인이 주를 이루었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의 투표가 진행되었다. 다행히 선관위의 철저한 준비로 코로나 19 추가 확산은 없었지만, 위험한 장면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 미국 대선도 전당대회와 집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도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기도 했다. 그야말로 혼돈의 정치 일정이 진행 중이다.

미래학자 쉐커(Schenker 2020)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내·국제정치의 불안감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했다. 그는 국제정치 영역에서 방역, 치료제, 백신을 둘러싼 외교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쉐커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코로나 19 과정

에서 국제적 패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학자들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국내 정치 영역에서도 새로운 쟁점이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팬데믹에 따른 불안감과 공포에 따른 민주주의 가치의 약화이다. 학자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공포감이 격화되면서 민주주의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방역 과정에서 지나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집회, 종교, 결사의 자유가 훼손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결국 코로나 19의 공포감이 커지면 민주주의를 약화할 우려도 존재한다(Lee 2020; 송경재 2020에서 재인용).

이런 현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여 코로나 19가 정치에 미친 다양한 영향을 재조명하여 민주주의의 내용과 가치에 관한 시민의식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는 첫째,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2016년)과 이후(2020년)의 시민이 생각하는 다양한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상을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발견된다면,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이 정치의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의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시민의 자유권 갈등에 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에서 감염병이나 재해,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에 대해 용인하는지를 분석하여 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는 설문조사에 기초한 계량적 연구방법론(quantitative study methodology)을 시도한다. 설문조사 자료는 2016년과 2020년 각각 실시된 이메일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문항은 다양한 민주주의 가치를 측정하여 코로나 19 이전인 2016년과 2020년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민주주의의 시민권 가치와 공동체 안전 간의 변화상은 2020년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III. 민주주의 시민의식 측정에 관한 논의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기원전 5세기 헤로도투스(Herodotus)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이자, 시대의 가치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초기 민주주의는 귀족정과 왕정, 제정이 아닌 민(民)에 의한 지배를 골자로 하는 정체(polity)로 제기되었다. 이에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Perikles)는 정치 권력이 소수에게 있지 않고 다수의 사람이 있는 아테네를 민주주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민주주의가 근대적 의미로 발전하면서 그 내용은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0세기 이후 민주주의의 의미는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생활방식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Pateman 1970; 문중섭 2004). 민주주의는 민중에 의한 지배를 기본으로 하지만 민주주의 가치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자유, 공화, 평등, 시민권(표현, 결사, 종교, 이동, 프라이버시 등)의 보장, 통치성, 정당성, 법치 등 그 구성 요소는 다양하다. 특히 민주주의는 학습장으로 후세에 승계된다는 점에서 문화적, 경제적 조건도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학습장 효과에 주목한 듀이(Dewey 1996)는 민주주의가 단순한 정치형태만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 공동생활의 형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보았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해 선행 연구자들은 다양하게 논의를 전개했다. 초기 민주주의의

가장 일반적인 구성 요소로 지목된 것은 바로 자유와 평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미 1789년 프랑스대혁명에서부터 제기된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으로 자유와 평등은 중요한 가치이다. 밀(Mill)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자유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Scarre 2014). 양심의 자유, 기호와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대체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그 통치 형태가 어떤 것이든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자유란 국가규제가 없고 개인의 개성을 중요시하여야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과 출판, 종교, 결사의 자유 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문중섭 2004, 59). 반면에 평등은 절대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를 지칭한다. 그리고 사회자산의 배분을 통한 비례적 평등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단순히 자유와 평등만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학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제 가치들이 민주주의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 주고 있다. 실제 민주주의가 현대와 같은 체계로 발전하기에는 여러 이론적 논의 단계를 거쳤다. 20세기 초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대표와 책임을 강조하는 민주주의가 등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내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도 활발하다. 즉 민주주의의 주요 구성요소와 가치에 관한 관심이 연구에 반영된 것이다.

초기 민주주의의 가치와 요인을 제기한 학자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저술한 토크빌(Tocqueville 2003)이다. 토크빌은 건국 초기의 미국 민주주의를 살펴보면서 시민참여와 결사체, 법과 제도,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토크빌은 시민참여문화를 강조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바로 자발적 참여, 법률과 제도, 결사체의 구성, 언론의 자유, 그리고 관습이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로 지적했다.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학자는 정치발전론적 시각에서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에서 다양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립셋(Lipset 1963, 49-60)은 경제와 교육수준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립셋은 기존 학자들이 민주주의제도 내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발전 요인을 추적한 데서 벗어나 경제와 교육 변인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립셋은 국가가 소득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으면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가 빨라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립셋의 논의는 지나친 단순화라는 점, 그리고 남아메리카 지역의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와 인과관계가 약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다양한 내용은 학자들에 의해 강조점은 다르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만하임(Mannheim 1991)은 민주적 성격으로서 안정, 관용, 개방, 자율, 적응성, 협동을 강조한다. 그는 민주주의의 운영에서의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한편 리프만(Lippmann)은 주로 공공심을 중요하게 보았다. 리프만은 공공에 대한 이익 추구하고 공익적 사고와 책임감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이러한 공공적인 가치는 정치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 운영의 원리로서 중요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구현될 때 민주주의가 생활로서 공공화된다고 보았다. 헤이우드(Heywood 2004, 139-140)는 민주주의가 민중이 스스로 통치하는 정부 형태, 사회적 불평등의 축소, 다수결 원칙, 소수의 이해관계를 보장, 보통선거, 민중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정부 체계로 구성할 수 있다고 중요한 핵심요인을 제시했다. 그리고 바커(Barker)는 앞에서 논의와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대두하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해도 좋다는 관용과 다수결의 원칙 그리고 타협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리고 타협에서는 구체적으로 개방성과 관용, 양보 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문중섭 2004, 13에서 재인용).

민주주의 이론가인 달(Dahl 2015)은 민주주의에 관한 우호 조건과 비우호 조건을 구분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한 비우호 조건을 언론의 통제, 부정부패, 외부의 간섭, 정치적

무관심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주의의 우호 조건에서는 문화적 동질성,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군대와 경찰에 대한 통제, 언론의 자유, 경제성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문화와 신념의 측면,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 시민권 적인 요구, 마지막으로 경제적 토대를 중요하게 보았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단순히 권력, 선거, 입헌, 법치주의 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서 발전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한정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넘는 포괄적인 요소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 간의 상호모순과 충돌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예를 들면, 자유와 평등의 병립) 실제 민주주의가 어떤 가치들로 구성되었는가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현대의 민주주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측정하고 있다.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민주주의 측정은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2020)의 *Freedom in the World* 측정이다. 프리덤 하우스는 세계 인권 선언에서 유래된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를 2개의 축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세부 구성요소는 선거 과정, 정치의 다원성과 참여, 정부 기능(개방성과 투명성), 표현의 자유, 신뢰, 법치, 자율과 개인의 권리 등을 측정한다. 이들 구성요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한 요소들을 추출하여 각각 항목에 따라 측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집계하여 전 세계 국가를 자유(Free) 국가, 부분적 자유(partly free) 국가, 비자유(not free) 국가로 구분한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와 함께 언론자유와 인터넷 자유도 측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거론되는 민주주의 요건과 가치, 시민의식 조사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이다. WVS는 1981년 유럽가치조사(European Values Survey)를 모태로 시작된 세계의 각기 다른 문화의 사회문화적, 윤리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WVS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규범, 가치관, 정치 사회적 태도, 종교적 신념, 성평등, 삶의 가치 등을 조사하여 민주주의 평가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에 반영된 WVS의 측정 지표 확대에 ①민주주의 지원 및 참여, ②외국인 및 소수 민족에 대한 관용, ③성 평등 지원, ④종교의 역할 및 종교 수준의 변화, ⑤세계화의 영향, ⑥환경에 대한 태도, ⑦일, 가족, 정치, 국가 정체성, ⑧문화 다양성, ⑨불안, ⑩주관적인 복지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고 있다(<https://www.worldvaluessurvey.org/>). 이 자료는 국제비교연구로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식 연구의 원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잉글하트와 웰젤(Inglehart & Welzel 2005)은 WVS자료를 활용하여 Inglehart-Welzel cultural map을 작성하여 전통적 가치 대 세속적·합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가치와 신념이 정치적, 성적, 경제적, 종교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증명한 연구로 주목받았다. 이들은 문화적인 접근방식으로 현대화가 인간 개발의 과정이며 경제발전이 개인의 자율, 양성평등, 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민주주의 가치와 평가에 대한 측정과 조사는 국제사회조사(ISSP)가 있다. ISSP는 미국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조사측정을 하고 있다. 주요한 민주주의적인 측정 항목은 ①정부 역할, ②사회연결망, ③사회 불평등, ④가족과 성의 역할, ⑤노동, ⑥종교, ⑦환경, ⑧국가 정체성, ⑨시민권, ⑩여가와 스포츠 등 10가지이다. 이외에도 각 대륙에서 조사되고 있는 바로미터(Barometer survey)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구성 요소를 측정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등 각 대륙의 바로미터 조사는 사회정치 현안에 관한 비교분석으로 ①사회문화적 지향, ②정치적 지향, ③민주주의 만족감, ④사회적 자본, ⑤시민 참여 등을 측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비교 연구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의식 조사는 주요한 측정지표를 중심으로 비교적인 관점에서는 유용한 측면이 있다. 많은 연구자가 비교연구를 위한 원자료로 이들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자료는 일반화를 통

한 동일문항의 조사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치게 일반화된 문항 설계로 인해 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다면성, 다층성을 통일적인 문항 설계로 측정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구성요인, 만족도, 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III. 2016년과 2020년 민주주의 가치 비교

1. 연구 방법론과 표본 개요

코로나 19와 민주주의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프리덤 하우스, WVS, ISSP 등의 다양한 시민 가치와 민주주의 의식 조사 설문 문항을 근간으로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문항을 설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한국적 맥락에서 재구성했다.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이후의 민주주의 가치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과거와 비교 가능한 원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연구진은 측정하기 위한 측정 지표로 WVS, ISSP 등의 문항과 함께 임혁백 등(2016)의 선행 설문 문항을 참고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의 주요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중요도 문항은 2016년 임혁백 등(2016)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진행한 민주주의 가치조사를 활용하여 시민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상(像)과 요인 그리고 시민 인식 문항을 재디자인 했다.

임혁백 등(2016)은 한국의 민주주의 변화에 주목하고 시민의 지향점과 가치에 따른 새로운 민주주의 전망에 대해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참여·심의·전자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융합한 헤테라키 민주주의(heterarchy democracy)로 제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개발했다. 그들은 한국의 다양한 민주주의 가치 중에서 잘 시행되지 않는 부분을 추출, 재해석하여 헤테라키 민주주의로 제시한 바가 있다. 이 설문조사의 세부 측정은 심의, 협력, 대의, 신뢰, 공익, 공동체성, 자율, 관용, 준법, 분권, 참여 등 11개 지표를 측정했다. 2016년의 설문조사에서 중심으로 조사한 것은 다양한 민주주의의 요소 중에서 한국인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부 문항에서 각각의 지표를 조작화하여 설계했다. 설문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자유와 평등적인 가치를 제외하고 다양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측정했다. 설문조사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제외한 이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2016년과 2020년 비교분석을 위해 사용된 설문조사 자료는 동일한 패널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조사 결과이다. 이 이메일 설문조사 자료는 4년의 시차는 존재하지만, 전국적인 민주주의 가치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로 2020년 코로나 19 이후와 비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거 동일 패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한다면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민주주의 가치 변화 분석의 설명력은 높아질 것이다.

< 표 1 > 공통의 측정 지표와 설문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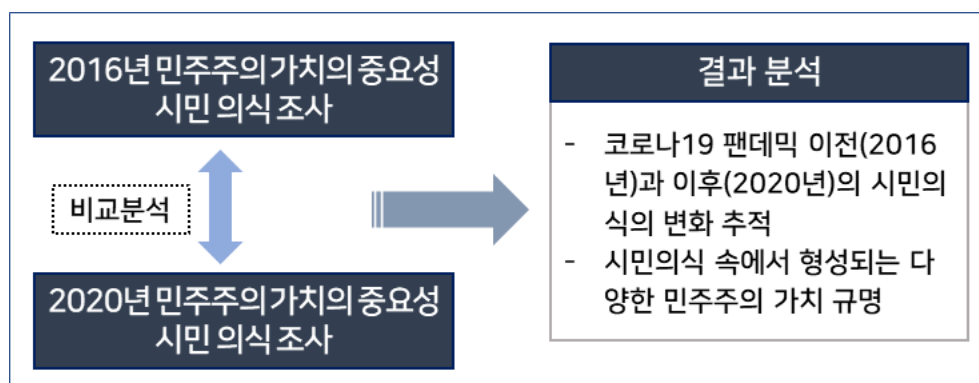
측정 지표	설문 문항
	공통 : 다음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들입니다. 다음의 민주주의 가치들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척도)
심의	정치·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해표출/토론/참여
협력	정치권과 시민 간 신뢰/소통/정책공유/협업
대의	시민 요구에 대한 정치권(정부)의 대응성(신속한 반응, 공정한 업무처리, 투명한 공개, 효율적 처리, 성과 도출)
신뢰	타인과의 신뢰 및 상호부조 추구
공익	사익보다는 공익 추구
공동체성	개인 활동보다는 연대 활동 추구
자율	권위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율 추구
관용	다수자보다는 소수자와 약자를 우선 배려
준법	나를 위한 위법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준법 추구
분권	중앙집중보다는 지방분권 추구
참여	시민참여는 정치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

연구 설계는 연구진이 사전에 고려한 민주주의 가치 조사를 기준으로 9월 17일, 23일, 10월 5일 3차례의 화상회의와 4회의 추가 서면 이메일 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주로 회의는 비대면 동영상과 이메일, 메신저 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연구가설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시민들이 인식하는 2016년(코로나 19 이전)과 2020년(코로나 19 이후)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그림 1 > 연구 모형 I



조사는 성,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한 다층적 할당추출법을 사용했다. 2016년 조사는 10월 6일~11일까지 1,143명을 추출하여 분석했다. 2020년 조사는 10월 24일~30일까지 1,315명을 추출했다. 각각의 주요 표본의 개요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본의 개요는 먼저 2016년은 남성이 582명(50.9%), 여성이 561명(49.1%)이다. 연령대별로도 50대와 40대가 각각 264명(23.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34명(20.5%), 19~29세는 208명(18.2%) 순이다. 2020년 표본은 남성 666명(50.6%), 여성 649명(49.4%)이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238명(18.1%), 30대 240명(18.3%), 40대 293명(22.3%), 50대 303명(23.0%), 60대 이상 241명(18.3%) 이다.

< 표 2 > 표본의 개요

구 분		2016년 (코로나 19 이전)		2020년 (코로나 19 이후)	
		빈도 (%)	비고	빈도 (%)	비고
합 계		1,143 (100.0%)		1,315 (100.0%)	
성	남성	582 (50.9%)	분산 ¹⁾ 2.50	666 (50.6%)	분산 2.50
	여성	561 (49.1%)	표준편차 ²⁾ 0.500	649 (49.4%)	표준편차 0.500
연령	만20-29세 ³⁾	208 (18.2%)	분산 1.769 표준편차 1.330	238 (18.1%)	분산 1.869 표준편차 1.367
	30대	234 (20.5%)		240 (18.3%)	
	40대	264 (23.1%)		293 (22.3%)	
	50대	264 (23.1%)		303 (23.0%)	
	60대 이상	173 (15.1%)		241 (18.3%)	

2. 분석

이 연구는 2016년(코로나 19 이전)과 2020년(코로나 19 이후)의 민주주의 가치에 따른 시민 의식은 차이가 있을 것을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비교분석은 2가지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첫째, 동일문항의 설계와 척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먼저 트리맵(tree map)을 통해 시민의식의 변화상 데이터를 시각화했다. 트리맵은 계층적으로 구조화(트리 구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는데 사용되는데 트리맵은 다르게 크기가 지정되고 색상이 지정된 사각형을 사용하여 시각화된 데이터로 비교분석이 가능한 방법이다. 둘째,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 SPSS 25를 사용한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평균 차이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첫째, 분석 결과 코로나 19 이전 2016년 조사에서 민주주의 가치 중에서 잘 실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심의(2.35), 참여(2.24), 공동체성(2.15), 분권(2.11), 준법(2.10) 등의 순이었다. 그렇지만 코로나 19 이후인 2020년 조사에서는 참여(2.43), 심의(2.21), 준법(2.3), 공동체성(2.28), 분권(2.2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잘 실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지표는 대의(+0.26), 준법(+0.20), 참여(+0.19)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한 것은 심의(-0.04)로 유

1) 확률분포 또는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려 주는 수치로 클수록 넓게 퍼지는 것을 의미한다.

2) 확률분포 또는 자료가 평균 주변에 모여 있는지 혹은 흩어져 있는지(산포도)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3) 2016년 설문조사에서는 당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일하게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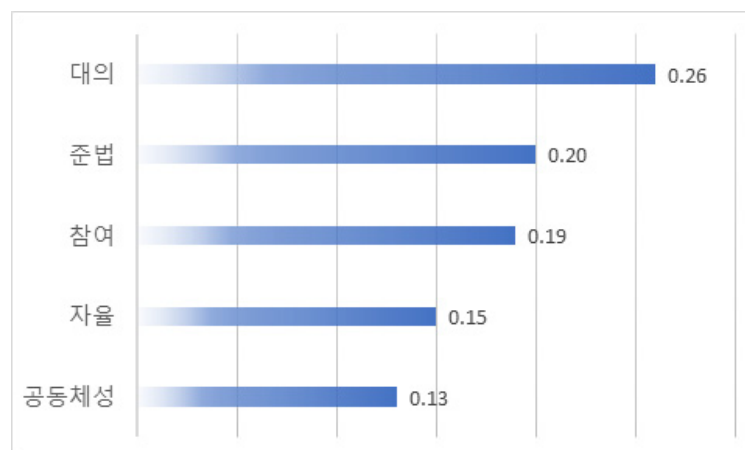
이상의 차이는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먼저 2016년과 2020년간의 시민의식의 차이이다. 여러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그 순위는 변화가 발견된다.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수준은 2016년 2.09포인트에서 2020년 2.20포인트로 상승했다. 민주주의의 여러 가치적 요인들에 대해 시민들은 잘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높아졌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 표 3 > 민주주의 가치들 간의 평균 비교

구분	2016년		2020년		차이(b-a)
	평균(a)	순위	평균(b)	순위	
심의	2.35	(1)	2.31	(2)	▼0.04
협력	1.98	(10)	2.09	(9)	▲0.11
대의	1.86	(11)	2.12	(8)	▲0.26
신뢰	2.07	(6)	2.15	(7)	▲0.08
공익	2.04	(7)	2.08	(10)	▲0.04
공동체성	2.15	(3)	2.28	(4)	▲0.13
자율	2.03	(8)	2.18	(6)	▲0.15
관용	2.02	(9)	2.07	(11)	▲0.05
준법	2.10	(5)	2.30	(3)	▲0.20
분권	2.11	(4)	2.23	(5)	▲0.12
참여	2.24	(2)	2.43	(1)	▲0.19
전체	2.09		2.20		▲0.11

다음으로 상승 폭이 큰 민주주의 가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민주주의 가치 중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대의로 나타났다. 대의는 4년 사이에 0.26포인트가 상승했다. 다음은 준법으로 0.20포인트로 집계되었다. 뒤를 이어 참여 0.19포인트, 자율 0.15포인트, 공동체성 0.13포인트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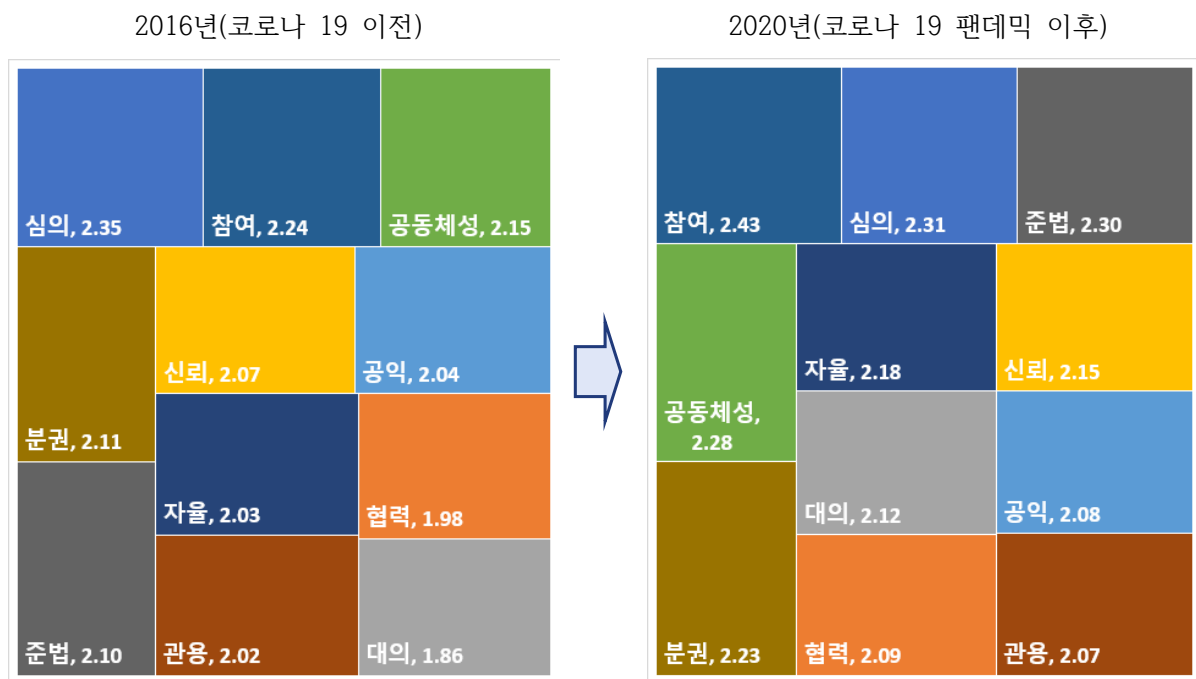
< 그림 2 > 상승 폭이 큰 상위 5개의 민주주의 가치



이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해석할 것이지만, 2016년 시민의식 조사보다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시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 가치는 대의와 준법, 참여, 자율, 공동체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비율의 차이가 아닌 구체적인 수치 증가라는 점에서 시민의식의 변화 폭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2020년에 시민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6년 대의는 1.86포인트로 중앙값(2.5 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2.12포인트로 상승해,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대의가 중요한 가치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주목할 것은 준법, 참여, 자율과 공동체성이 2016년보다 2020년 조사가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준법, 자율과 공동체성이다. 이들 가치 모두 2020년에 더욱 중요하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이것은 공동체성의 틀 속에서 유지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번 1회의 조사 결과로 이를 일반화하기는 힘들 것이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의식이 준법과 참여, 자율,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민주주의 가치 중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림 3 >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민주주의 가치 비교(트리맵 분석)



이를 바탕으로 2016년과 2020년의 민주주의 가치에 관한 트리맵 분석을 시각화하면, 민주주의 가치 중에서의 변화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2016년에는 한국 민주주의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심의, 참여, 공동체성을 응답했지만 2020년 코로나 19 이후에는 참여, 심의, 준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념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코로나 19 이후의 준법과 공동체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시민의식에서 코로나 19 방역 과정에서 준법과 공동체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2016년 코로나 19 이전과 2020년 이후의 시민의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에 대한 검증이다. 통계분석을 위해 사회경제 변인 집단 간의 다변량 변인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일원분산분석(F 검정)을 실시했다. 사회경제 변인별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에 관한 차

이는 구체적인 지표로서 2016년 코로나 19 이전과 2020년 코로나 19 이후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데 유의미할 것이다.

분석 결과, 공익 변인을 제외한 10개의 변인이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심의 변인은 코로나 19 이전 시기보다 많이 하락했다($F=3.448$, $p<.1$). 협력 변인은 2020년 코로나 19 이후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F=15.857$, $p<.001$). 대의 변인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승했다($F=77.243$, $p<.001$). 신뢰 변인 역시 2016년은 2.07포인트에서 2.15포인트로 상승했다($F=9.327$, $p<.01$). 공동체성 변인은 2016년 2.15포인트에서 2020년 2.28포인트로 상승했다($F=22.389$, $p<.001$). 자율 변인은 2016년 2.03포인트에서 2020년 2.18포인트로 증가했다($F=26.595$, $p<.001$). 관용 변인은 2016년 2.02포인트였으나 2020년 2.07포인트로 상승했다($F=2.946$, $p<.1$). 준법 변인은 상승 폭이 큰 변인으로 2016년 2.10포인트에서 2020년 2.30포인트로 상승했다($F=45.575$, $p<.001$). 분권 변인 역시 2016년 2.11포인트에서 2020년 2.23포인트로 상승했다($F=16.032$, $p<.001$). 마지막으로 참여 변인은 2016년 2.24포인트였으나 2020년 2.43포인트로 증가했다($F=34.727$, $p<.001$).

< 표 4 > 민주주의 가치 F검정 요약

구 분		빈도	<i>M</i>	<i>SD</i>	<i>F</i>
심의	2016년(코로나 19 이전)	1,143	2.35	.564	3.448 †
	2020년(코로나 19 이후)	1,315	2.31	.682	
협력	2016년(코로나 19 이전)	1,143	1.98	.683	15.867 ***
	2020년(코로나 19 이후)	1,315	2.09	.671	
대의	2016년(코로나 19 이전)	1,143	1.86	.709	77.243 ***
	2020년(코로나 19 이후)	1,315	2.12	.742	
신뢰	2016년(코로나 19 이전)	1,143	2.07	.675	9.327 **
	2020년(코로나 19 이후)	1,315	2.15	.642	
공익	2016년(코로나 19 이전)	1,143	2.04	.760	1.478
	2020년(코로나 19 이후)	1,315	2.08	.720	
공동체성	2016년(코로나 19 이전)	1,143	2.15	.737	22.389 ***
	2020년(코로나 19 이후)	1,315	2.28	.681	
자율	2016년(코로나 19 이전)	1,143	2.03	.750	26.596 ***
	2020년(코로나 19 이후)	1,315	2.18	.735	
관용	2016년(코로나 19 이전)	1,143	2.02	.744	2.946 †
	2020년(코로나 19 이후)	1,315	2.07	.719	
준법	2016년(코로나 19 이전)	1,143	2.10	.752	45.575 ***
	2020년(코로나 19 이후)	1,315	2.30	.699	
분권	2016년(코로나 19 이전)	1,143	2.11	.745	16.032 ***
	2020년(코로나 19 이후)	1,315	2.23	.697	
참여	2016년(코로나 19 이전)	1,143	2.24	.809	34.727 ***
	2020년(코로나 19 이후)	1,315	2.43	.755	

† $p<.1$, * $p<.05$, ** $p<.01$, *** $p<.001$

IV. 코로나 19와 시민의식

1. 변인과 연구가설

다음 분석에서는 코로나 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2016년과 2020년 민주주의 가치에 관한 인식의 중요성 차이가 존재하였다면 구체적으로 2020년 코로나 19 이후 나타난 공동체 안전과 시민의 자유권에 대한 의식은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과 인념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최근 코로나 19가 가져온 공포심이 민주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직접적 전염병 감염 우려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공동체 안전보장과 개인 자유권이 상호 공존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지는 4월 8일 자에서는 “민주주의가 공포에 잠식당하고 있다(Angst frisst Demokratie)”라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19 공포감이 격화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약화할 것이란 경고를 한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가시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봉쇄가 진행되면서 강제적 규율이 일상화되었고, 지나친 봉쇄로 인한 시민 자유권의 훼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치하라(Ichihara 2020)는 한국의 ICT 활용의 코로나 19 방역을 분석하면서, 일괄적인 적용보다는 각 국가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특히 지나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는 향후 시민권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경고를 했다. 감염병 유행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시민권을 강조하는 견해가 대립하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이숙중(Lee 2000) 역시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19 재확산 과정에서 성 소수자의 정보공개와 지나친 사회적 낙인찍기에 대해 비판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우려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한 방역과 개인 시민권의 유지를 위한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송경재(2020) 역시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의 설정에서 일부 개인의 시민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공포를 확대하여 개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도 없는 딜레마(dilemma)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팬데믹으로 인한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이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넘어서 종교집회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등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시민권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시민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코로나 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항을 설계했다. 문항은 두 가지 층위에서 측정하였다. 첫째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은 코로나 19 방역 초기부터 지나친 감염자 동선 공개와 정보 제공 요청 등으로 문제가 되었다. 실제 이치하라(Ichihara 2020)는 일본과 유럽에서 하기 힘든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방역 초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정부와 학계에서도 이후 동선 공개 최소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암호화된 QR 코드 방식(전자 명부제), 수기 명단 작성에서 이름 삭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비판이 있었다(송경재 2020).

둘째, 집회 및 종교의 자유 침해는 대구와 서울의 일부 종교를 중심으로 한 전파와 집회가 진행되면서 제기되었다. 공동체 안전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집합 제한이 집회·결사와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2020년 8월 27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코로나 방역 협조 요청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종교시설이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 대상이 되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

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은 종교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김상도 2020). 이는 코로나 19 방역 과정에서 종교활동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로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코로나 19 방역이 장기화하면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시민권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방역 과정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개인정보와 사생활 유출과 집회와 종교의 자유를 측정했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다음과 같다.

< 표 5 > 민주주의와 개인의 시민권 측정 문항

	문항	측정
공동체 안전과 시민의 자유	코로나 19 방역과정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커트 척도 (5척도)
	코로나 19 방역과정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집회와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커트 척도 (5척도)

다음으로 독립변인은 한국 사회의 정치 변인으로 가장 핵심적인 변인들을 투입했다. 먼저 사회경제적 변인(성, 세대, 학력, 소득)을 투입하여 공동체 안전과 시민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성, 세대 변인은 이미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된다. 서복경(2018)과 정한울, 송경재, 허석재(2019)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해화역 시위에서 나타난 한국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성의 문제가 정치화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들은 연구에서 한국에서 그동안 잠재된 여성의 차별과 불이익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운동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중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2008년과 2016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의 정치적 참여 강화도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송경재 2018).

그리고 세대 역시 주요한 정치적 선택의 결정 변인이다. 세대 변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정치과정에서 세대별 정치적 선택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의 양극화는 세대 균열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이갑윤·이현우 2014, 7). 한중우(2012, 20-21)는 한국과 미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세대의 정치활동에 주목하고 이들을 소셜 정치혁명 세대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넷을 잘 다룰 수 있는 20대와 30대의 정치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들이 오프라인과 다른 네트워크 공론장(networked public sphere)에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달톤(Dalton 2011) 역시 참여하는 젊은 층(engaging youth)의 전 세계적인 활동에 주목하고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달톤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젊은 세대의 참여가 하락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의 활발한 정치적 활동에 주목했다(송경재 2018에서 재인용).

그리고 소득과 교육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전통적으로 정치발전론자인 립셋(Lipset 1963)에 따르면, 경제적 요인인 사회의 부, 산업화, 도시화, 교육 등에 의하여 측정되며, 이는 정치발전, 민주주의 공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이아몬드(Diamond 1999) 역시 민

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에서 소득과 교육 수준이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다이아몬드는 미래의 제4의 민주화의 물결이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소득과 교육은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에서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 변인과 함께 이념도 변인 분석에 포함했다. 이념은 최근 한국 사회정치 분석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념은 전통적으로 정책 이슈에 대한 평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이념에 따른 정책 평가 그리고 정당 지지는 중요한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는 활발하다(강원택 2007). 이러한 정책 이슈에 관한 이념 연구는 이념이 정책 이슈의 찬성과 반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Klingemann 1979; 박경미·한정택·이지호 2014, 206).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정책이나 이슈의 지지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주요한 이념적 차이가 한국에서는 주로 미국이나 북한과의 정책 등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거에서 후보자 지지의 주요한 변인으로도 간주한다(강원택 2007). 이처럼 이념의 중요성이 한국 정치에서 부각됨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이념 변인을 투입하여 코로나 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의식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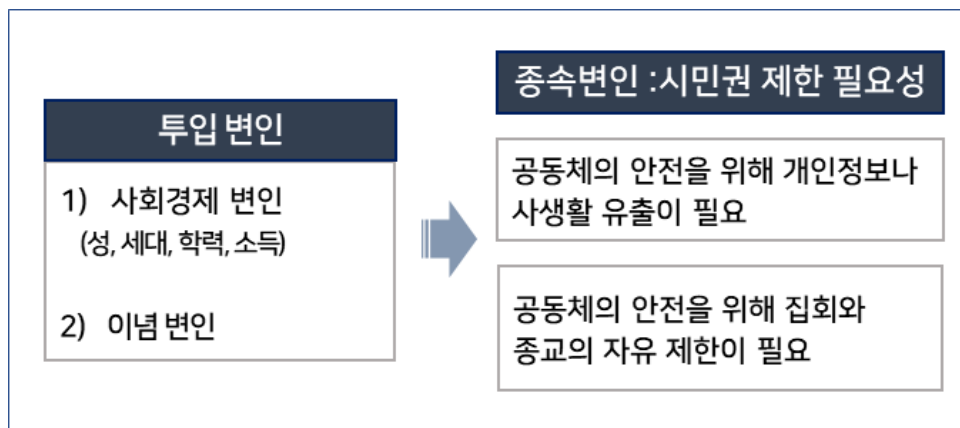
이상을 정리하여 연구가설과 연구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 : 코로나 19 방역 과정에서 시민권의 제한 필요성에 대해 성, 세대, 학력, 소득, 이념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 코로나 19 방역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 유출의 필요성에 대해 성, 세대, 학력, 소득, 이념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 코로나 19 방역 과정에서 집회와 종교의 자유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성, 세대, 학력, 소득, 이념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그림 4 > 연구 모형 II



2. 분석

연구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세부적으로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사회경제, 이념 변인 등 독립 변인들을 일괄투입방식(enter)에 의한 최소자승법(OLS)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 필요성 모델은 사회경제적 변인 성, 세대, 학력, 소득, 이념 변인

을 투입했다. 모델 분석결과,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4.122$, $p<.01$). 그리고 투입된 변인의 모델 설명력 $Adj R^2=.012$ 로 도출되었다. 잔차의 자기상관을 파악할 수 있는 *Durbin-Watson* 통계량은 1.990으로 통계적 해석에 문제가 없다.⁴⁾ 투입된 독립변인 중에서 유의미한 변인은 세대($p<.05$), 이념($p<.001$) 변인이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이 필요하다는 변인과 인과성이 있다. 세부 변인별로 살펴보면, 고연령 세대, 진보적 집단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공동체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공동체 안전을 위하여 집회나 종교의 자유 제한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분석과 같이 사회경제 변인과 이념 변인을 투입하여 누가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지에 대한 사회경제적, 이념적 집단을 도출하고자 했다. 회귀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F=15.213$, $p<.001$),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 R^2=.051$ 이다. 역시 모형의 자기상관을 파악할 수 있는 *D-W*값은 1.903으로 자기상관은 없었다.

집회나 종교의 자유 제한이 필요 모형은 성($p<.01$), 세대($p<.05$), 학력($p<.1$), 이념($p<.001$) 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코로나 19로 인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집회나 종교의 자유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여성, 저연령 세대, 저학력,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집단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념 변인은 회귀방정식의 단위당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β 가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표 6 > 회귀분석 결과 요약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이 필요				집회나 종교의 자유 제한이 필요			
	<i>B</i>	표준 β	<i>t</i>	<i>Sig</i>	<i>B</i>	표준 β	<i>t</i>	<i>Sig</i>
(상수)	2.857		15.382	***	3.478		17.194	***
사회경제 변인								
성별	.030	.015	.551		.156	.072	2.634	**
세대 (5-point scale)	.047	.066	2.389	*	-.055	-.069	-2.544	*
학력 (5-point scale)	-.026	-.025	-.854		-.062	-.053	-1.874	†
소득 (8-point scale)	.003	.006	.201		.008	.015	.537	
이념 변인								
이념 (5-point scale)	.112	.102	3.696	***	.242	.198	7.323	***
<i>F (Sig)</i>	4.122 (**)				15.213 (***)			
<i>Adj R²</i>	.012				.051			

† $p<.1$, * $p<.05$, ** $p<.01$, *** $p<.001$

V. 연구의 요약과 함의

개인의 자유권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해답은 존재하기 어렵다. 실제

4) 자기상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Durbin-Watson* 통계량 값을 측정한다. *D-W*계수는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할 때 쓰이는 테스트로, 자기 상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검정 통계량은 2에 근접하면 자기 상관성이 없고, 0에 근접하면 잔차 간의 양의 상관관계, 4에 근접하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둘 다 양립해야만 올바른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Lee 2020; 송경재 2020). 마치 근대 민주주의 이론에서 자유와 평등의 중요성 논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민주주의의 가치문제다. 어느 것이 먼저일 수 없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들이기 때문에 선후와 강약의 강도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민주주의 가치 간의 갈등이자, 딜레마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현실에서는 여러 국가가 공동체의 안전을 더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권이 장기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연구는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시민 민주주의 가치 의식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시민의식의 선호집단을 파악했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시민의식 중에서 민주주의 가치의 우선 순위는 변화가 발견된다. 우선, 심의 변인을 제외하고 다른 변인들은 2020년 조사 결과가 더욱 높게 도출되었다. 둘째, 2016년 시민의식 조사보다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시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 가치는 대의와 준법, 참여, 자율, 공동체성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과거보다 준법과 공동체성, 자율 등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2016년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트리맵 분석 결과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는 참여, 심의, 준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준법과 공동체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넷째, 민주주의 가치 중에서 일정한 시민권의 제한 필요성에 관한 분석에서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과 집회나 종교의 자유 제한 필요성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성, 세대, 이념별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어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함의는 팬데믹 이후 시민의 민주주의 가치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한 변인 중에서 코로나 19 상황과 연관된 변인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는 시민의식에서 코로나 19 방역 과정에서 준법과 공동체성에 대한 환기가 이번 조사에서 반영되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코로나 19라는 공동체 안전 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역 당국의 규칙을 준수하고, 참여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19 이후 한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 중에서 준법과 공동체성, 참여, 대의, 심의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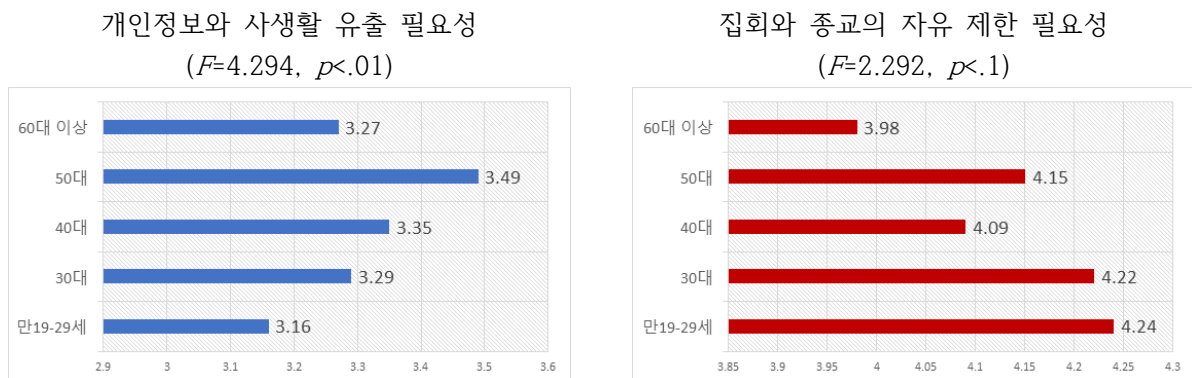
둘째, 여성은 남성보다 집회나 종교의 자유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사생활 유출도 통계적인 차이는 없지만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성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인식은 남성보다 강한 특성을 보인다. 여성의 이 같은 경향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강한 공동체성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가족공동체, 이웃공동체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줄이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민주주의 가치 간의 충돌과 관련하여 세대 변인은 흥미로운 결과가 확인된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고연령 세대가 강하고, 집회나 종교의 자유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저연령 세대가 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고연령 세대(특히 50대)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므로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많지만, 집회와 종교활동은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저연령 세대는 반대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집회나 종교의 자유 제한 필요성은 신천지 교회와 일부 종교에서 나타난 종교집회 강행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코로나 19 방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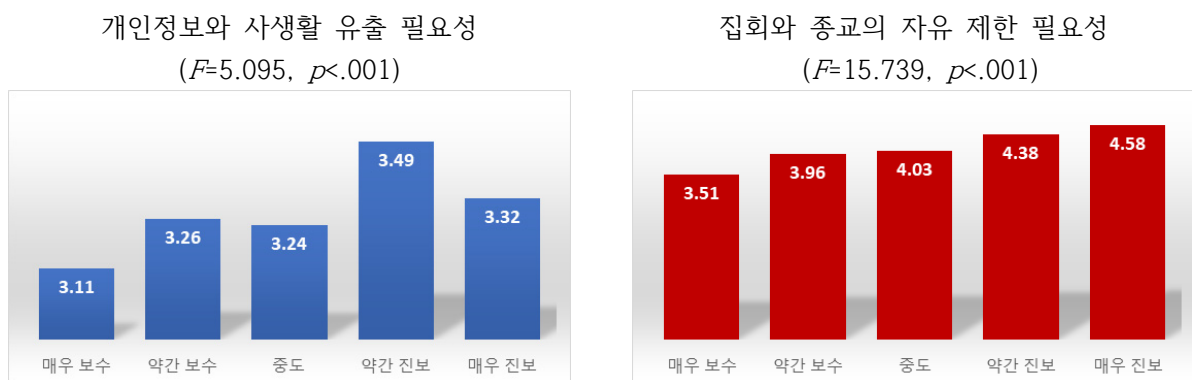
세대 간의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한국에서 시민권 중에서도 세대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생각할 대목이다. 즉 향후 시민권이 더욱 강화되면 세대별로 민주주의 시민권의 중요성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 아직 전면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고연령 세대와 저연령 세대 간의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미래 민주주의 공고화 차원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음을 알려준다.

< 그림 5 > 세대별 ANOVA 결과



넷째, 이념 변인도 시민권과 중요한 인과성이 발견된다. 이념 변인은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이 필요하다는 의식과 집회나 종교의 자유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식 모두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인과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시민일수록 공동체 안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시민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그림 6 > 이념별 ANOVA 결과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진보적 이념의 속성과는 다른 결과라는 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진보적 이념은 공동체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시민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Inglehart & Welzel 2005; 정한울 등 2019). 특히 2018년 제화역 시위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직접행동에서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집단이 개인정보, 사생활 유출 문제에 대해 국가의 부적절한 대응에 분노한 것을 상기한다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부의 이념적 지향과도 연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촛불시위를 통해 보수 정권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현 정부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잘 통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진보적인 집단에서 정권에 대한 지지와 방역 정책에 대한 지지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권에 대한 지지와 방역에 대한 지지가 결합되어 나타난다면 실제 민주주의 시민권의 제한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응답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념 변인의 공동체성 강조는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좀 더 보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hasty generalization)보다는 발견된 함의를 보완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2020년의 설문조사의 결과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시민의식이 변화된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다. 2016년 이후 자연스럽게 사회·정치·경제·문화적 변인이 작용하여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도나 시민의식이 변화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라는 환경요인의 단일효과에 의한 변화인지를 해석하는 것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4년 동안 시민의 의식 변화가 코로나 19라는 상황만으로 변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변인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이번 연구가 체계화된 동일 패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연구에서는 동일 패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설문조사 기관에서 진행하여 어느 정도의 동일 패널의 한계를 줄이고자 했지만, 분석의 엄밀성 차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둘째, 민주주의 가치의 세부 문항이 다양하게 반영되지 못한 문제도 있다. 2016년에 조사한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 인식도를 활용하여 2020년에 이를 적용한 것으로 수많은 민주주의의 가치 변인들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 시민의식의 변화와 민주주의 가치의 갈등에서 누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결과는 아직 코로나 19 팬데믹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래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 변화할 수 있는 미래 민주주의의 상에 대해서도 고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작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진일보된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 시민의 의식 변화와 민주주의 가치 간의 갈등에 관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강원택. 2007, 『인터넷과 한국정치』. 서울: 집문당.
- 김상도. 2020. “교회 지도자 종교의 자유는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없다.” 『아이뉴스 24』 2020년 8월 27일. <http://www.inews24.com/view/1294198> (검색일: 2020년 11월 25일)
- 듀이, 존. 이홍우 옮김. 1996.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서복경. 2018. 『2018년 ‘해화역 시위’에 대한 해석』. 행정안전부 용역보고서
- 박경마·한정택·이지호. 2014. “한국사회 이념 갈등의 구성적 특징.” 이갑윤·이현우 편. 2014. 『한국의 정치균열 구조: 지역, 계층, 세대 및 이념』. 서울: 오름. 203-232.
- 셴커, 제이슨(Schenker, Jason) 저. 박성현 역. 2020. 『코로나 이후의 세계』. 서울: 미디어숲.
- 송경재. 2020. “팬데믹(pandemic) 시대, 빅브라더의 등장과 사회통합.” 국립민복 가치확산 학술회의 자료집.
- 송경재. 2018. “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비관습 참여적인 소셜 정치세대의 등장.” 『한국

- 정치연구』, 제27집 제2호.
- Scarre, Geoffrey(스카, G). 김요한·임정아 옮김. 2014. 『밀의 <자유론> 입문』. 서울: 서광사.
- 임혁백·송경재·장우영. 2016. 『BIG STEP』.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채진·박석중·이광수·김한진·김일구. 2020. 『코로나 투자 전쟁』. 서울: 페이지2북스.
- 정한울·송경재·허석재. 2019. 『사회적 갈등의 경로 분석과 사전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갈등학회 행정안전부 용역연구 보고서.
- 한중우 지음. 전미영 옮김. 2012. 『소셜 정치혁명세대의 탄생』. 서울: 도서출판 부키.
- 헤이우드. 앤드류. 조현수 옮김. 2004. 『정치학』.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Dahl, Robert. 2015. *On Democracy*. Yale University Press.
-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l. 2010. *Engaging Youth in Politics: Debating Democracy's Future*. New York: IDEBATE Press.
- Freedom House. 2020. "Freedom in the World 2020 Methodology." <https://freedomhouse.org/reports/freedom-world/freedom-world-research-methodology> (검색일: 2020년 10월 25일).
- Ichihara, Maiko. 2020. "Corona-Tracking and Privacy: The Opposite Approaches of South Korea and Japan." East Asia Institute. Asian Democracy Issue Briefing.
- Inglehart, Ronald & Welzel, Christian.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ingemann, Hans-Dieter. 1979. "Measuring Ideological Conceptualization." In Barnes, Samuel H. & Kaase, Max et al.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Thousand Oaks: Sage.
- Lee, Sook Jong. 2020. *Guarding Democratic Values: South Korea's Successful Fight against the Coronavirus* East Asia Institute. ADRN Issue Briefing.
- Lipset, Seymour Martin. 1963.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Anchor Books.
- Mannheim, Karl. 1991. *Ideology and Utopia*. England: Psychology Press
- Pateman, Carole.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cqueville, Alexis. 2003. *Democracy in America*. Indianapolis: Hackett.

‘코로나 19와 한국의 민주주의: COVID-19 Before and After’에 대한 토론문

조희정(서강대학교)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의 내용과 적설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코로나 19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한국 민주주의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민주주의 가치도 변화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시민이 체감하는 민주적 요소를 측정하는 문제는 더 나은 민주주의 논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상황에서 변화하는 민주주의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연구자는 다양한 차원에서 코로나 19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했다. 우선 2016년에 조사한 설문 문항과 동일하게 조사를 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좀 더 체계적인 설문이 존재했다면 보다 많은 논의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이지만, 기존 설문조사 결과가 존재하여 이를 비교하여 2020년 현 상황을 해석하는데 있어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과 2020년 응답을 비교해보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은, 2016년에는 심의, 참여, 공동체성, 분권, 준법 등을, 2020년에는 참여, 심의, 준법, 공동체성, 분권으로 준법과 분권 가치가 상대적으로 큰 위치변화를 했으며, 준법과 공동체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의 영향이 아무래도 설문조사에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은 국가 또는 권위체(전문가)의 제안을 수용하고 이를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기도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연구에서도 잘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것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에서는 응답 항목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을 시민의식의 발전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위기로 인해 공동체 보호 의식이 일시적으로 더 높아진 것일 뿐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한 세부 분석이 필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 19가 종식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는 코로나 19 위기가 해소된 이후 같은 시기 차이를 두어 2024년과 비교하면 명확해질 부분이라 추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응답 항목의 우선순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바로 시민의식이 높아졌다고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는 연구자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할 수 없다면 적어도 전망에 대한 언급이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주주의의 가치 요소 들 중에서 준법 요소 또한 너무 광범위한 항목이기 때문에 시민의식 측정에서는 좀 더 측정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준법이라는 질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적이고 다의적이기 때문이다. 마치 한국 사회가 모든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2016년의 준법과 2020년의 준법은 시민들에게 다른 가치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연구자는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

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자가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2016년의 준법의 의미와 2020년의 준법의 의미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준법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포괄성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의 차이에는 물론 코로나 19위기가 큰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넷째, 정책적 차원에서는 이 글에서의 논의대로 시민의식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정치 제도나 정치과정에서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의 과제가 남아 있다. 연구자도 지적했지만 “감염병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나친 시민의 자유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즉, 시민의식의 발전만큼 신속하고 반응적인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데이터로 포착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평가는 연구방법론 외의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 적어도 정책반응성을 분석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섯째,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의식, 제도뿐만 아니라 참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에서 큰 위치변동이 있었던 준법과 분권 말고 심의와 참여가 역시 언제나 우선 순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상징적이다.

따라서, 코로나 19위기 상황에서 제도 속에 심의와 참여가 적절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또 다른 논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위기 과정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나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도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시민의 실천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이 비교연구의 함의를 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코로나 19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시민권 제한과 관련한 세대와 이념적인 차이도 의미가 있다. 이 부분은 연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지만, 세대별 그리고 이념별로 개인의 민주주의 시민권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많은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과 종교집회의 자유가 세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세대별로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가적으로, 조사시기 선정이유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2020년 조사 시기인 ‘10월 24-30일’이 코로나 19 위기에서 어느 국면에 해당하는가 라는 의미를 부연 설명하여 (2020년 11월 말 현재에도 코로나 19 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조사했는가 하는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2020년 하반기에 이번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2021년에도 유사한 조사를 진행한다면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코로나 19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인 시각에서 장기적 추세를 파악한다면, 향후 의미있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후속 연구에서는 가능한 시민의 민주주의 가치의 우선 순위를 보다 정교한 개념화와 조작화 등이 요구된다.

[발표 3]

코로나 19와 세계화에 대한 인식 변화

2020. 12. 22.

정 재 환
(울산대)

코로나 19와 세계화에 대한 인식 변화

정재환(울산대학교)

1. 서론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세계화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코로나19가 향후 세계화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작년 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하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를 전 세계적 유행병(pandemic)으로 선언하였다.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한 유행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세계화로 인해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다른 국가로 전파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제적 교류가 급격하게 축소되어 방역물자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자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야기하는 취약성의 문제도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는 향후 각 국가의 대외정책을 보호주의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보호주의적 흐름의 강화는 세계화의 급속한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염병의 확산이라는 특정한 이슈에 제한된 일시적 현상으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인지는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 등과 같은 외부적 충격은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외생적 요인’(exogenous factor)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생적 요인들이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촉발하려면 이러한 요소들이 주는 충격이 인간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에 주는 의미(meaning)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국제정치경제질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외생적 요인이 주는 충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내생적 요인’(endogenous factor)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가 세계화라는 국제정치경제질서에 미칠 영향은 전염병의 확산과 국제적 교류의 급속한 축소라는 물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야기한 세계화에 대한 위험성 인식의 증가가 향후 세계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계화라는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지탱했던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 패권국의 국제적 리더십, 국제기구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코로나19가 미친 인식적 변화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본 논문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확산이라는 보건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하였다. 하지만 세계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증가는 전염병 확산 등의 보건안보 영역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세계화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한국사회의 다수는 여전히 국제적 교류와 개방을 강조하는 세계화가 확대되거나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가 야기한 세계화에 대한 위험성 인식은 세계화의 경로의존성을 넘어설 수준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미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면서 1945년 이후 국제질서의 관

리에 있어 패권적 리더십을 행사해왔던 미국의 연성권력이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을 대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상정되었던 중국의 연성권력 역시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됨에 따라 패권적 리더십의 부재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세계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고안하는 것이 향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적 교류를 일정정도 차단하는 국가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여 세계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관리되는 세계화’를 형성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국제적인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다자주의 외교가 향후 한국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국제정치경제질서는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깨트리는 외생적 요인과 이러한 불안정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내생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코로나19가 세계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살펴보고 향후 세계화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전망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향후 세계화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세계화를 유지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5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해서 세계화의 전망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함의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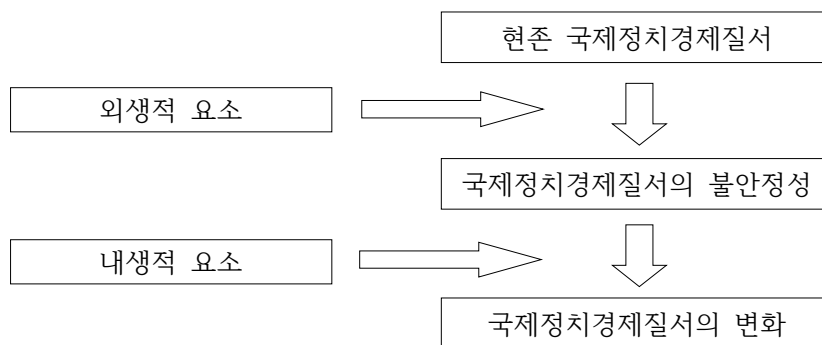
2.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

코로나19가 야기할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관념적 효과에 달려있다. 즉 코로나19로 발생하는 물리적 효과가 국제정치경제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할 것인가는 이 물리적 효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념적 효과를 강조하는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간의 규범적 또는 인식적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즉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관념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해석을 외부의 물리적 요소와 인간의 행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상정한다(Adler 1997).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이 해석이라고 하는 관념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특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환경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를 “단속평형모델”(punctuated equilibrium model)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구성주의 정치경제학과 달리 외부적 충격을 강조하는 단속평형모델은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경제위기 등과 같은 “외생적 요소”(exogenous factor)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석한다. 단속평형모델은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장기간의 균형 또는 안정 상태와 단기간의 급속한 변화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정치경제질서 변화는 장기간의 안정 상태를 허무는 “중대국면”(critical juncture)에서 발생한다. 즉 정치경제질서는 기본적으로 “경로의존성”(path-dependence)에 의해서 지배되는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지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중대국면에서는 “경로형성적”(path-shaping)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Krasner 1984). 또한 이러한 중대국면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안정적 균형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촉매적 외부 사건”(catalytic external event)이다(Krasner 1976, 341).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충격은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외생적 요소이다.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외생적 요소들은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생적 요소들이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외생적 요소가 야기한 충격에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또한 인간이 외부적 충격에 대한 특정한 대응을 하려면 외생적 요소들이 야기하는 충격이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주는 의미(meaning)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외생적 요소가 야기하는 충격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충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석”이라는 관념적 요인은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야기하는 “내생적 요소”(endogenous factor)로 기능한다(Blyth 2002).

<그림 1>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



<그림1>에 표현된 것처럼,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는 두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코로나19 등과 같은 외생적 요소가 야기하는 충격은 기존 질서의 안정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변화를 위한 기회의 창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특정한 질서의 경로의존성을 약화시키는 외생적 요인은 질서 변화를 설명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외생적 요소가 야기하는 불안정성은 이와 같은 불안정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지는 않는다(Chwieroth 2010, 496). 따라서 외생적 요소가 야기하는 불안정성이 어떠한 변화를 야기할 것인가는 이러한 불안정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한 대응은 외생적 충격에 대한 해석에 달려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는 외부적 충격이라는 외생적 요소와 이에 대한 해석이라는 내생적 요소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단속평형 모델이 외생적 요소가 기존 질서에 일으키는 불안정성에 대한 제도변화의 “외생적 과정”(exogenous process)에 주목한다면,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은 이 외생적 요소가 일으키는 불안정성에 행위자들이 어떻게 해석하여 대응하는가에 대한 “내생적 과정”(endogenous process)에 주목한다.

3. 코로나19와 세계화의 미래

코로나19가 야기할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온 세계화의 과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세계화 또는 경제적 세계화는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국제적 이동의 자유를 증진시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계화라는 국제적 경제교류의 증대는 각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개발도상국들과 신흥국들의 경제적 수준을 상당히 향상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90년 이후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 거주하는 상당한 수준의 인구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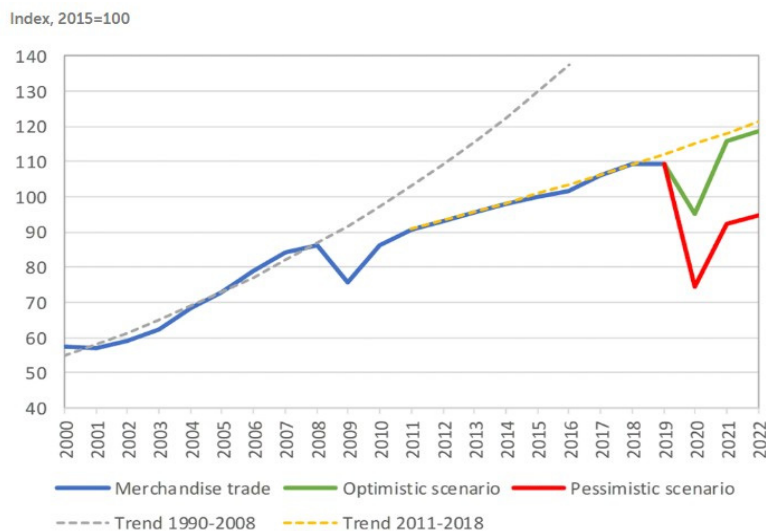
되었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신기술과 국제적 경쟁의 확산으로 생산성이 증가하여 전 세계 소비자들의 후생 역시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전 세계적인 경제통합은 각 국가들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갈등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OECD 2017).

하지만 세계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 역시 존재한다. 특히 세계화에 따라 각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가하여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른 국가들로 전파되는 위험성 전염효과(contagion effects)가 한층 심화되었다. 이러한 위험성 전염효과가 가장 잘 나타난 영역은 국제적 이동에 대한 물리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금융시장이었다(Classens and Forbes 2001).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적 불안정성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로 급속하게 전염되어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금융위기의 수렁에 빠져버렸다(Jackson 1999). 또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 시장의 채무불이행의 증가에 따른 미국 금융기관들의 몰락이 야기한 미국의 금융적 혼란은 전 세계로 전파되어 국제금융시장을 엄청난 혼란에 빠트렸다(Tooze 2018).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금융적 위험성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라면,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전염병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다. 작년 말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하게 전 세계로 전파되어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선언하였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코로나19가 가지는 강한 전파력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화라는 구조적 환경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그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국제적 교류가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2020년에 세계무역은 13-32%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과 서비스 분야 무역에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WTO는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무역의 축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야기된 세계무역의 하락폭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WTO 2020).

<그림 2> 세계무역량 전망, 202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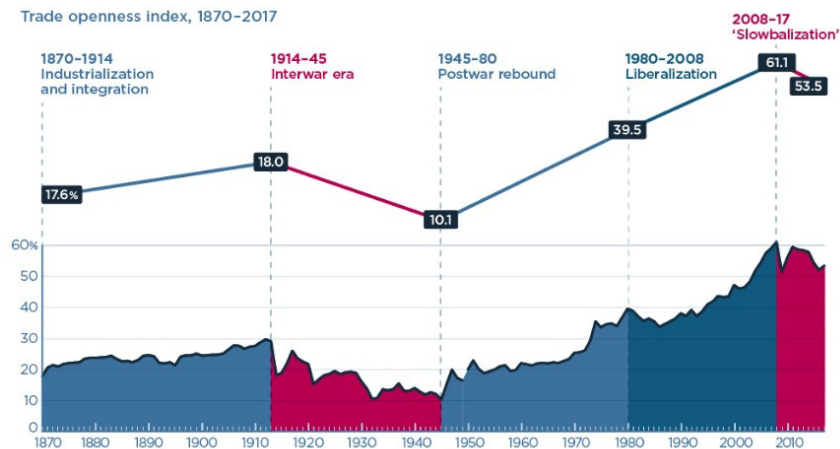
출처: WTO (2020).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무역의 급속한 축소가 야기되자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국가들은 세계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미국 경제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위험할 정도로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고, 프랑스 재무부 장관인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는 “세계화의 구성”에 대해 재평가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Soergel 2020).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인 필 호건(Phil Hogan)은 “개방적 무역정책은 향후 경제회복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Hogan 2020).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산소호흡기와 보호 장비의 극심한 부족 현상을 겪은 이후 “개방적 무역체제는 호주의 경제적 번영의 핵심적인 요소”였지만 “국내 경제적 주권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myth 2020).

이처럼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국제적 교류의 급격한 축소가 야기되자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의존성 등이 발생시킬 수 있는 세계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화 또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게 되면 각 국가는 이와 같은 위험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제적 대외정책은 보다 보호주의적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세계화라는 경제적 상호의존에서 벗어나려는 탈세계화(degloabalization)의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Irwin 2002).

특히 코로나19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화의 흐름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세계화는 스로우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The Economist 2019). <그림 3>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1945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전 세계 GDP에서 세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GDP에서 세계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스로우벌라이제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가 약화되고 있는 흐름 때문에 2018년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은 세계화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Martin 2018).

<그림 3> 무역 개방 지수, 1870-2017



출처: Irwin (2020).

코로나19로 야기된 세계화에 대한 위험성 인식 증가는 2008년 위기 이후 세계화의 흐름이 약화되고 있는 스로벌라이제이션의 경향을 가속화시켜 1914-1945년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탈세계화로의 전환을 야기할 수도 있다(조동준 2020). 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화를 스로우벌라이제이션으로 전환시켰다면, 코로나19는 스로벌라이제이션을 탈세계화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탈세계화의 전망과는 반대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 국경의 의미가 더욱 퇴색되어 세계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Goldin 2020). 즉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세계화의 경향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도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경향이라는 관습적인 시각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Gray 200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꿈이 사라졌다”는 전망이 존재했었다(Wolf 2008). 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커다란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세계화의 흐름이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지만 다소간 그 흐름이 약화되었다고는 해도 세계화는 외부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화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세계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세계화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전망을 상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망은 “갈등적 탈세계화”(conflictual deglobalization)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화가 가져다 준 상호의존성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여 각 국가들이 보다 경제적 주권 또는 자급자족적 능력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세계화에 대한 위험성 인식 증가로 인해 각 국가들이 경제적 주권 회복을 위해 보호주의적 정책을 강화한다면 각 국가들의 경제적 갈등과 충돌이 심화되어 세계화의 경향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둘째, “관리되는 세계화”(managed globalization)이 새로운 국제정치경질서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관리되는 세계화는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적 주권 회복 노력이 심각한 국제적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국경 통제의 문제에 대한 국내적 갈등이 발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전

염병에 대하여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 규칙에 근거한 국가적 통제의 증가로 인해 세계화의 흐름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가 야기하는 위험성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정당한 조치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경제적 주권 회복을 위한 각 국가들의 노력이 세계화 자체를 위협하는 갈등적 탈세계화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세계화의 흐름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과 금융의 흐름이 다소간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디지털 데이터의 전 세계적 이동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디지털 세계화”(digital globalization)라는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였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 코로나19는 대면 경제활동을 축소시키고 있지만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에 기초한 비대면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경제활동의 증가는 디지털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Ciuriak 2020).

4. 세계화의 조건

코로나19는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화는 갈등적 탈세계화, 관리되는 스로버라이제이션, 디지털 세계화 중에서 어떠한 경로로 발전해나갈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야기할 물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관념적 효과 역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코로나19의 물리적 효과와 세계화의 변화를 매개하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고, 또한 세계화의 위험성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역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세계화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코로나19 또는 전염병이라는 특정한 이슈에 제한된 것으로 머물 것 인지 아니면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으로 발전할 것인지는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게 보면 세계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이점과 부정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이다. 단순히 표현해서 세계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세계화의 긍정적인 이점에 대한 인식을 압도할 정도로 강하게 증가한다면 향후 세계화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강한 전파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계화 역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구조적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 경제통합과 국제적 교류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재화와 자본뿐만 아니라 인간의 국제적 이동 역시 빠르게 증가하였다. 세계화로 인한 국제적 교류와 이동의 증가는 지역적 전염병을 전 세계적 전염병으로 확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제적 교류의 축소로 인해 방역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세계화가 야기한 상호의존성이 각 국가들의 자립성을 약화시켜 취약성을 증가시켰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화를 지탱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이었다. 각 국가의 경제가 개방되어 세계경제에 통합됨에 따라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적 부가 증가되었다. 물론 세계화에 따른 이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소득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화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된 사회세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계화를 지탱했던 근본적인 바탕에는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존재한다

는 점은 분명하다(Frieden 2006). 이 점에서 코로나19로 야기된 세계화에 대한 위험성 인식의 증가가 세계화가 야기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할 것인가 하는 점이 향후 세계화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세계화가 제공하는 경제적 효과를 상당정도 포기하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코로나19가 세계화에 대한 위험성 인식을 증가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코로나19가 세계화를 유지해왔던 정치적 요소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불러왔는가 하는 문제도 코로나19가 세계화에 미칠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영역이다. 세계화와 확산되고 유지되는 데에는 시장과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치적 요소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세계화를 지탱했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요소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패권국가의 존재였다.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이 강조하는 것처럼 개방적인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패권국가의 국제적 리더십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Kindleberger 1973; Krasner 1976). 패권안정이론의 주요 이론가 중에 한명인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에 따르면 19세기에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던 세계화의 흐름이 1930년 대공황을 계기로 붕괴된 주요한 이유는 패권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1945년 이후 세계화를 지탱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1945년 이후 계속적으로 확산된 세계화는 미국이라는 패권국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자유주의적 패권 질서(liberal hegemonic order)라고 규정할 수 있다(Ikenberry 2001).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성을 회복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Helleiner 2014). 패권국가가 세계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물리적 능력에 기초한 강성권력(hard power)을 갖추어야 할 뿐만 타국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인 연성권력(soft power)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Nye 1990).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향후 세계화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일 코로나19의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전반적인 국제적 리더십에 회의론으로 확산된다면 미국의 연성권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지금까지 세계화를 지탱해왔던 중요한 정치적 토대가 변화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패권국의 지위를 대체할 만한 강성권력을 갖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받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의 엄청난 경제력 상승 덕분에 1945년 이후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도전받고 있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Allison 2017).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은 지금까지 세계화를 유지해 왔던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대체제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더라도 중국의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한다면 향후 세계화는 미국이 아닌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가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과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향후 세계화의 안정성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패권국가의 정치적 리더십과 함께 국제제도 및 기구의 역할도 세계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정치적 요소이다. 국제기구들은 국제적 합의를 통해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확립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Keohane 198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개방적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G20, WTO, IMF 등의 국제제도와 국제기구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받는다. 이와 같

은 국제제도와 기구를 통해 도출된 국제적 합의가 각 국가들의 갈등과 충돌은 억제시킴으로써 1930년대 대공황과 달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화 자체를 급격하게 붕괴시키는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았다(Drezner 2014).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가 국제제도와 국제기구의 중요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향후 세계화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5. 코로나19와 세계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세계화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전망하기 위해서 세계화의 핵심적인 세 가지 영역, 즉 세계화의 경제적 이점과 위험성, 패권국의 국제적 리더십, 국제기구의 신뢰성에 대한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화의 미래는 각 국가들의 대외정책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으로는 세계화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세계화와 관련된 한국 대외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임과 동시에 코로나19가 야기할 변화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2.28 기념 코로나19 대유행과 민주주의 시민의식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사)한국정치학회”가 “(주)엠브레인”에 의뢰해 2020년 10월 24일부터 3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또한 설문조사를 위해 성,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한 다층적 할당추출법을 사용하여 1,315명을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 1> 표본의 개요

구분		빈도 (%)	비고
합 계		1,315 (100.0%)	
성	남성	666 (50.6%)	분산 2.50 표준편차 0.500
	여성	649 (49.4%)	
연령	만19-29세	238 (18.1%)	분산 1.869 표준편차 1.367
	30대	240 (18.3%)	
	40대	293 (22.3%)	
	50대	303 (23.0%)	
	60대 이상	241 (18.3%)	

1) 경제적 세계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화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계화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점이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야기한 세계화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세계화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점을 상쇄할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향후 세계화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선 이번에 진행된 조사에 국제적 교류의 차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제적인 경제교류와 국경통제 등과 같은 전 세계적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

제적 교류의 차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5.4%로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국제적 교류의 차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완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4%에 머물렀다. 또한 “국제적 교류의 차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방역조치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과 “국제적 교류의 차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방역조치는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8.4%와 0.8%에 불과하였다.

<표 2> 경제적 세계화와 방역조치

국제적 교류의 차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55.4%
국제적 교류의 차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완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35.4%
국제적 교류의 차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방역조치는 최소화해야 한다	8.4%
국제적 교류의 차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방역조치는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0.8%

이처럼 이번 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들은 세계화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점을 희생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세계화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할 정도로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실시한 조사에서 “세계화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어려워졌다”는 진술에 절대 다수인 84.5%가 동의하였다(이숙종 · 김세영 2020). 이는 다수의 응답자들이 세계화를 코로나19 확산의 구조적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응답자들이 세계화가 코로나19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세계화를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전염병 확산이라는 보건안보(health security)에 한정해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세계화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점을 상쇄할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위험 인식 증가가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역 조치와는 별도로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국제적 교류와 개방을 증진하는 세계화”를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적 교류와 개방을 증진하는 세계화를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7.6%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고, 41.4%의 응답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다소 축소해야 한다” 또는 “적극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9.4%와 1.5%에 불과하였다.

<표 3> 국제적 교류와 개방을 증진하는 세계화에 대한 의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7.6%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41.4%
다소 축소해야 한다	9.4%
적극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1.5%

특히 코로나19 이후 각 국가들이 대외적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로 인해 향후 보호주의적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자유무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적 경제교류와 경제개방을 증진하는 자유무역을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9.1%와 43.7%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다소 축소해야 한다”와 “적극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6%와 1.1%에 불과했다.

<표 4> 자유무역에 대한 의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9.1%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43.7%
다소 축소해야 한다	6%
적극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1.1%

이처럼 세계화를 억제하여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다수가 찬성하였지만 향후 국제적 교류와 개방을 증진하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에는 90%에 가까운 절대 다수의 응답자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한국사회의 절대 다수는 향후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염병 확산 등의 ‘보건안보’와 관련된 세계화의 억제와 세계화 자체의 억제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즉 세계화의 축소는 보건안보의 영역에 한정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야기한 세계화의 위협성에 대한 인식은 보건안보의 영역에 제한되어 있으며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으로는 발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다수는 전염병 확산 등과 같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세계화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세계화 자체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세계화에 관련된 핵심적인 쟁점은 세계화와 탈세계화라는 이분법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세계화인가라는 세계화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 1945년 이후 국제정치경제질서는 국제적 교류와 개방을 증대하면서 각 국가들의 정책적 자율성을 일정정도 보장해주는 “연계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Ruggie 1982).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세계화의 흐름은 각 국가들의 정책적 자율성보다는 국제적 교류와 개방을 더욱 강조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어왔다(Rodrik 2011). 이처럼 각 국가들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축소시키는 1980년대 이후 세계화의 특징을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은

“황금 구속복”(golden straitjacket)이라고 표현하였다(Friedman 1999).

이번 조사에서 한국사회의 다수는 국제적 교류와 개방을 축소하는 탈세계화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보건안보 등의 영역에 한정해서는 황금 구속복으로 작동하는 세계화가 어느 정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세계화의 방향은 ‘탈세계화’라기보다는 ‘관리되는 세계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세계화 자체의 축소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전염병 확산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계화가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코로나19로 인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패권국가의 국제적 리더십

패권국가의 국제적 리더십은 세계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1945년 이후 미국은 20세기 전반기에 무너진 세계화를 다시 회복하고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는 향후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특히 연성권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들은 미국이 보여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8.3%의 응답자가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하였고, 49%의 응답자가 “대체적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다소 긍정적이다” 또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각각 11.3%와 1.4%에 불과했다. 또한 미국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을 방지하는 데 보여준 국제적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역시 40.2%와 46.7%의 응답자가 각각 “매우 부정적이다”와 “대체로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코로나19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다소 긍정적이다”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1.9%와 1.3%에 불과했다.

또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패권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코로나19의 확산과정에서 보여준 대응과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미국보다 더욱 부정적이다.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8.6%의 응답자가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하였고, 36.2%의 응답자는 “대체로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중국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을 방지하는 데 보여준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이다”와 “대체로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51.6%와 35.4%를 차지하였다.

<표 5>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매우 부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다소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한국	2.1	8.8	44.6	44.5
미국	38.3	49	11.3	1.4
중국	48.6	36.2	13.5	1.7

<표 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평가

	매우 부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다소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한국	3.2	10.8	40.7	45.3
미국	40.2	46.7	11.9	1.3
중국	51.6	35.4	11.6	1.4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한국이 코로나19의 확산과정에서 보여준 대응과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매우 대조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89.1%와 라는 절대 다수의 응답자들이 한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도 86%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대응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보여준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2.5%의 응답자는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하였고, 44.9%가 “대체로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하여 50%가 넘는 응답자가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매우 긍정적이다”와 “대체로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8%와 35.8%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더욱더 부정적이다.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42.7%가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하였고, “대체로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도 44%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매우 긍정적이다”와 “대체로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1%와 12.1%에 불과하다. 이처럼 무려 86.7%의 응답자가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7>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

	매우 부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다소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미국	12.5	44.9	35.8	6.8
중국	42.7	44	12.1	1.1

앞서 언급한 동아시아연구원의 실시한 미국과 중국의 호감도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 미국에 대하여 “적대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로 차지하였지만 2020년에는 10.2%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조사에서는 77.3%에 달했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63.7%로 줄어들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에 16.1%에서 2020년에는 40.1%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에 50%에서 20.4%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이숙종 · 김세영 2020). 이와 같은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증가는 한국사회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에서 미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미국의 호감도 역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Wike et al. 2020). 또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역시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Silver et al. 2020).

이처럼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했다는 점이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달리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가 부재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은 국제적 리더십의 부재는 코로나19가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들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Nichols 2020). 또한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에 대한 국내적 대응과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코로나19라는 보건안보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과 중국 자체에 대한 비호감도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연성권력이 심대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45년 이후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패권국가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왔던 미국의 연성권력은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대체할 만한 경성권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평가는 미국보다 더 부정적이다. 연성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패권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성권력의 측면에서 보면 향후 세계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 리더십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리더십의 공백은 향후 세계화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과 중국의 부정적 평가가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제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강대국들의 국제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7.8%를 차지하였고, 53.5%가 “약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0.8%와 7.9%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응답자들이 향후 국제질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강대국들의 국제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연성권력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부분 하락하였다. 따라서 향후 국제적 리더십의 부재에 따른 국제적 갈등과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연성권력과 국제적 리더십의 훼손은 향후 ‘갈등적 탈세계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8> 국제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국제적 리더십의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0.8	7.9	53.5	37.8

3) 국제기구

국제적 합의를 통해 국제적 규칙과 규범을 확립하고 이를 전파하는 국제기구는 1945년 이후 세계화의 확산과 안정적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코로나19가 국제기구의 신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은 향후 세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을 방지하는 데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세계보건기구의 방역지침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들의 방역지침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7%가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하였고 50.5%는 “약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각각 8.2%와 37.6%를 차지하였다.

<표 9> 코로나19와 관련된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들의 방역지침에 대한 신뢰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8.2	37.6	50.5	3.7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비하면 국제기구의 신뢰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사회의 평가와 비슷하게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도 63%의 응답자가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35%의 응답자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Wike et al. 2020).¹⁾

또한 “국제기구의 합의와 국내정책이 충돌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14.4%가 “전적으로 국제적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국제적 합의에 따라 국내정책을 다소간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8.6%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국제적 합의와 무관하게 국내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에 불과했다. 이처럼 다수의 응답자들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제적 합의에 (일정정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3%로 차지하였고, 39.3%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의 수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와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8%와 0.8%에 불과했다.

<표 10> 국제적 합의 준수

전적으로 국제적 합의를 따라야 한다	14.4%
국제적 합의에 따라 국내정책을 다소간 조정해야 한다	78.6%
국제적 합의와 무관하게 국내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7%

<표 11> 국제기구 참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7.3%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39%
참여의 수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	2.8%
참여할 필요가 없다	0.8%

이와 같이 국제적 합의 준수와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관리되는 세계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하락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한국사회에서 다수는 패권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유지되는 세계화보다는 국제기구에서 도출되는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 세계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보다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한국 대외정책의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는 국제적 합

1) 이 조사는 14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인 14개국은 미국,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한국, 일본, 호주 이다.

의에 한국의 입장이 보다 잘 반영되도록 하는 다자주의 외교라고 보인다.

6.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전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세계화의 억제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지탱해왔던 패권국의 국제적 리더십과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증가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보여준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세계화 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절대 다수의 응답자들이 국제적 교류와 개방을 강조하는 세계화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계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패권국의 국제적 리더십과 국제기구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분명히 세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켰기는 하지만 세계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세계화가 전염병 확산 등의 보건안보 영역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세계화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는 세계화의 경로의존성을 넘어서는 수준의 세계화의 위험성 인식을 야기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는 국제질서의 경로의존성을 탈피하여 탈세계화를 야기할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세계화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존재한다. 첫째,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보건안보 영역에서 심대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세계화를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보건안보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위기 시에는 통화 및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 자본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각 국가에게 보다 폭넓게 부여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도출된 바 있다(Chwieroth 2014). 이러한 점에서 항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건안보나 금융시장 등의 영역에서 국제적 교류의 증가에 따라 위험성 전파가 발생하면 국제적 교류를 일정정도 차단할 수 있는 국가의 자율성이 향후 보다 증대될 수 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미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면서 1945년 이후 국제질서의 관리에 있어 패권적 리더십을 행사해왔던 미국의 연성권력을 상당부분 약화시켰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을 대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상정되었던 중국의 연성권력 역시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 점에서 향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특징은 “오래된 것은 죽어가지만 새로운 것은 태어날 수 없는” 패권적 리더십의 “왕위교체기”(interregnum)라고 할 수 있다(Gramsci 1971: 276). 이와 같은 패권적 리더십의 공백은 향후 세계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연성권력과 패권적 리더십의 약화로 인해 패권적 리더십의 부재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세계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고안하는 것이 향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세계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계화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시기와 영역에 한정하여 국제적 교류를 일정정도 차단하는 국가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여 세계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관리되는 세계화’를 형성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국제적인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적 합의의 도출을 위한 다자주의 외교가 향후 한국 대외정책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

이다.

<참고문헌>

- 이숙종 · 김세영. 2020. “한국인의 대외 정체성: 세계화와 주요국 및 정책이슈에 대한 인식.” EAI 워킹페이퍼.
- 조동준. 2020. “코로나-19와 지구화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60(3): 125-167.
- Adler, Emanuel. 1997.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3(3): 319-363.
- Allison, Graham T. 2017. *Destined for War*. 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 Blyth, Mark. 2002. *Great Transformations: Economic Idea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wieroth, Jeffrey. 2010. "How Do Crises Lead to Change?" *World Politics* 62(3): 496-527.
- Ciuriak, Dan. 2020. "Digital Trade in a Post-Pandemic Data-Driven Economy." *G20 Insight*, October 12.
- Classens, Stijn and Kirsten Forbes. 2001. *International Financial Contagion*. New York: Springer.
- Drezner, Daniel W. 2014. *The System Worked: How the World Stopped Another Great Depres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den, Jeffry. 2006. *Global Capitalism: Its Fall and Ris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Friedman, Thomas L. 1999. *The Lexus and the Olive Tre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Goldin, Ian. 2020. "Covid-19 Proves Globalisation Is Not Dead." *Financial Times*, August 26.
- Gramsci, Antonio.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London: Lawrence & Wishart.
- Gray, John. 2001. "The Era of Globalisation Is Over." *New Statesman*, September 24.
- Helleiner, Eric. 2014. *The Status Quo Crisis: Global Financial Governance after the 2008 Meltdow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gan, Phil. 2020. "Introductory Statement by Commissioner Phil Hogan at Informal Meeting of EU Trade Minister." European Commission, 16 April.
- Ikenberry, G. John. 2001. *After Vic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rwin, Douglas A. 2020. "The Pandemic Adds Momentum to the Deglobalization Tren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Jackson, Karl D. 1999. *Asian Contagi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a Financial Crisis*. Boulder: Westview Press.
- Keohane, Robert O.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ndleberger, Charles P. 1973.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rasner, Stephen D. 1976.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28(3): 317-347.
- Krasner, Stephen. 1984. "Approaches to the State: Alternative Conceptions and Historical Dynamics." *Comparative Politics* 16(2): 223-246.
- Mackinsey Global Institute. 2016. *Digital Globalization: The New Era of Global Flows*. New York: Mackinsey & Company.
- Martin, Katie. 2018. "Davos 2018: Macron Says Globalisation Facing 'Major Crisis.'" *Financial Times*, January 25.
- Nichols, Michelle. 2020. "U.N. Chief Laments Lack of Global Leadership in Coronavirus Fight." *Reuters*, May 1.
- Nye, Joseph S. 1990. "Soft Power." *Foreign Policy* 80: 153-171.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7. "Making Globalisation Work: Better Lives for All." Key Issues Paper,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 Rodrik, Dani. 2011. *Globalization Paradox*.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Ruggie, John Gerard. 1982. "International Regimes, Transactions, and Change: Embedded Liberalism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 379-415.
- Silver, Laura, Kat Devlin and Chirstine Huang. 2020.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Pew Research Center*, October 6.
- Smyth, Jamie. 2020. "Coronavirus Shortages Prompt Australia to Bring Manufacturing Home." *Financial Times*, April 15.
- Soergel, Andrew. 2020. "Pandemic Raises Worries over Global Trade's Future." *US News*, April 10.
- The Economist. 2019. "The Steam Has Gone Out of Globalisation." *The Economist*, January 24.
- Tooze, Adam. 2019. *Crashed: How a Decade of Financial Crises Changed the World*. London: Penguin Books.
- Wike, Richard, Janell Fetterolf and Mara Mordecai. 2020. "U.S. Image Plummets Internationally as Most Say Contury Has Handled Coronavirus Badly." *Pew Research Center*, September 15.
- Wolf, Martin. 2008. "The Rescue of Bear Sterns Marks Liberalisation's Limit." *Financial Times*, March 26.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20. "Trade Set to Plunge as COVID-19 Pandemic Upends Global Economy." Press/855, April 8.

“코로나 19와 세계화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토론문

공민석(서강대학교)

이 논문은 코로나19가 세계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가 과연 세계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인지를 평가했다. 코로나19와 세계화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세계화를 지탱하는 세 가지 요소, 즉 ①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 ② 패권국의 리더십, ③ 국제제도와 국제기구의 역할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서 조사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는 세계화 자체에 관한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연성권력 약화가 관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패권적 리더십이 공백이 향후 세계화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외교의 거장 키신저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나, 뉴욕타임스의 프리드먼이 이제 인류의 역사가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 즉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19의 국제정치적 함의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토론과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이슈다. 물론 현대사회의 기술적 발전 수준이나 국제정치의 거버넌스 구조를 고려했을 때, 과연 코로나19가 현대 국제정치의 본질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 내거나 국제정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전개되고 있던 주요 사건과 현상들의 전개방향이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와 세계화의 관계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려는 이 연구의 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국제정치적 함의에 관한 대부분의 국내외 논의들이 세계화의 종언,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위기 등을 언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관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리더십의 부재였다. 2020년 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코로나19가 중국에게 재앙적인 “체르노빌 순간(Chernobyl Moment)”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팬데믹이 도래하고 미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되면서 중국의 “체르노빌 순간”이 미국의 “수에즈 순간(Suez Moment)”, 즉 미국의 리더십 상실, 나아가 패권붕괴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그러나 중국 또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우선,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불투명한 초기 대응은 팬데믹이 확산되는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의 대응 또한 인권이나 자유, 투명성, 개방성 등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에 따라 팬데믹이 가속화한 리더십의 위기가 단지 리더십의 부재를 의미하는 ‘G0’의 상황보다는 두 강대국의 갈등이 국제질서의 불안정을 악화시키는 “G-minus-2”로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등장했다.

G-minus-2 시대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역전이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경제 침체와 글로벌 공급망 훼손, 이로 인한 ‘리쇼어링(reshoring)’ 흐름 속에서 세계화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팬데믹 발생 직후의 초기 논의는 중국의 생산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면서 의약

품과 방역 용품 생산을 중국에 의존하던 국가들은 물자 부족에 직면했고, 이는 특정 국가의 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화 구조의 취약성과 위험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개별적으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국가들은 상호의존성을 줄이고 국민건강,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해 자급자족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호주의적 조치와 핵심 생산 시설의 국내 이전을 도모하는 등 탈세계화(degloabalization) 지향의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더 이상 “공급측 감염(supply-side contagion)”, 즉 중국발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세계화 구조 자체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리더십 부재의 또 다른 결과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붕괴다. 키신저는 팬데믹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붕괴와 “성곽 도시(walled city)”의 도래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국가들이 자급자족을 추구하고 각자도생을 모색하면서 배타적 생존의 논리가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협력을 압도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주의적 대응이 확산되면서 과거보다 덜 자유롭고 덜 개방적인 세계,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약화되는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전망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팬데믹에 대한 국제 공조 부재와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발흥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팬데믹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 의약품 및 방역물자 확보를 향한 경쟁 속에서 국제적 협력 기제는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 팬데믹이 선포된 직후 UN 안보리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해 모든 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해 실패했다. 문제 해결의 중추가 되어야 할 WHO도 무능을 노정했다.

이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코로나19의 세 가지 국제정치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서 파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설문의 방향 또한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토론문이 아래에서 제기하는 세 가지 항목을 보완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면 더 완결성이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첫 번째는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제기다. 우선 <표2>에서 제시된 질문들은 세계화가 주는 이득과 방역의 필요성 중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조사 결과 방역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세계화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표3>과 <표4>에 나타난 조사 결과는 이와는 상반된다. 이 논문은 이를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변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인식을 두고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질문 문항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거나, 더 많은 질문이 추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표3>과 <표4>의 질문들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원론적이어서 코로나19 시대 세계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에 과연 적절한 질문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표5>, <표6>, <표7>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역할에 대한 현실적 평가와 관련된 문항이고, <표9>는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현실적 평가이다. 그런데 <표5>, <표6>은 규범적·원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이므로 현실적 평가에 관한 문항과 구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규범적·원칙적 측면에서는 세계화의 동력들을 지지하는 인식이 많지만, 현실에 대한 평가에서는 세계화의 동력들이 해체되고 있다는 평가가 강한데, 이에 대한 해석을 과연 세계화에 대한 지지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다소 논쟁적일 수 있어 보인다. 조건이 허락한다면 추후 질문의 내용이나 문항의 구성 등을 더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연구에서 활용하지 못한 조사결과나 문항이 있다

면 더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두 번째는 독립변수로서 코로나19의 위상에 관한 문제제기다. 세계화의 위기와 관련된 담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등장한 것만은 아니다. 세계무역량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감소 추세에 있었고, ‘포퓰리즘의 확산’, ‘지정학의 귀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계화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위기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코로나는 이러한 담론이 더 확산되는 계기였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문문항과 연구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코로나19 전후의 인식변화, 코로나19가 기존의 추세에 미친 영향 등).

(3) 마지막으로 설문을 통해 확인한 ‘인식’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다. 세계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코로나19 이후 세계화의 주요 동력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이 반드시 이러한 인식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인식에 대한 분석을 현실에 대한 분석과 결합하고, 현실에 대한 분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의 서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의 관념적 효과가 세계화라는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결과를 통해서 더 풍부하게 논의된다면,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라운드테이블 종합토론]

포스트 코로나, 정치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

윤성이(경희대, 한국정치학회장) / 79

서정건(경희대) / 83

조진만(덕성여대) / 87

장우영(대구카톨릭대) / 89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과학협의회 공동 특별 학술세미나]
COVID-19 Before & After, 정치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 토론문

윤성이(경희대)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사회과학협회의 공동 특별 학술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전과 후의 시민의식 변화를 사회자본,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국제질서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는 지대하고 직접적이다. 매일의 일상이 과거와 같지 않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 비가시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모든 일이 과거와 같지 않은 그야말로 뉴 노멀 (new normal)의 시대가 되었다. 정재환교수의 논문에서 인용하자면 “오래된 것은 죽어가지만 새로운 것은 태어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뉴 노멀 시대는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20세기 말부터 본격화된 디지털 혁명/4차 산업혁명/AI 혁명은 우리 앞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펼쳐 놓고 있다. 농경사회가 면의 사회였다면, 산업사회는 선의 사회이고, 지금의 정보사회는 점의 사회라 할 수 있다. 농경사회는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는 재배 과정이 매년 동일하게 반복된다. 산업사회는 변화와 발전이 있는 선의 사회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과거에 근거해 있고 미래 또한 현재를 바탕으로 진화해 나간다. 한편 점의 사회에서는 현재의 위치는 파악할 수 있으나 어느 지점에서 도래했는지, 향후 어떤 점으로 이동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정보사회의 특징으로 불예측성 혹은 불확실성을 든다. 코로나19는 기왕의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을 더욱 가속화하고 강화시키고 있다. 당장 내일에도 일터에 가고, 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도 별 탈이 없을지 확신할 수가 없다.

디지털 혁명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작동방식을 바꾸면서 ‘전환의 시대’를 가져왔다면, 코로나19는 우리 생명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불안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불예측성과 불확실성은 불안함을 담고는 있지만, 발전, 진화, 창조라는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예측성과 불확실성에는 불안과 위험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더 길고 넓게 펼쳐져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한 세 편의 논문이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고 있으나 분석의 결과 밝혀진 내용들이 많은 부분 모호하고 상호 모순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분석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가 우리 삶과 인식에 미친 영향이 쉽사리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심오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국가 간 개방과 교류를 지향하

는 세계화가 국제질서의 기본 가치가 된 지는 오래되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단절과 폐쇄의 삶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와 디지털 초연결사회는 국가와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지구촌 마을을 꿈꾸게 하였고, 실제 우리는 오랜 기간 지구시민사회를 만들고자 애써 왔다. 개인의 소속감 혹은 정체성을 지역보다는 국가에, 국가보다는 지구시민사회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해 왔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국가의 문을 닫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과 지역 간에 물리적인 혹은 심리적인 벽을 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절과 폐쇄가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아닐뿐더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미 오랜 기간 우리 삶의 노멀(normal)이 된 세계화와 초연결사회를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 나라, 우리 지역의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 하더라도 외부 세계에 남아있는 병균은 언제든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 올 것이다.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정재환교수의 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상호모순적인 우리의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정재환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세계화의 경제적 효과, 패권국의 국제적 리더십, 국제기구와 국제체도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19가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세계화를 억제하여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강력한 방역조치는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교류와 개방 그리고 자유무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세계화를 지탱하는 중요한 정치적 요소인 국제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미국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국제적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대해서도 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WHO와 같은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도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응답자들이 향후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국제기구에서 만든 국제협약을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교수는 향후 국제질서가 “오래된 것은 죽어가지만 새로운 것은 태어날 수 없는” 패권적 리더십의 “왕위교체기”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 주장한다.

송경재교수는 코로나19 정국을 전후한 민주주의 가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송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준법과 공동체성이 강화된 점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2016년 데이터와 비교해볼 때 점수 변화가 가장 많은 가치는 ‘대의’이고 ‘준법’과 ‘참여’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대의’는 시민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즉 정부와 정치권이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가치라는 뜻이다. 코로나19 이후 개인들이 인식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의’ 요소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것은 불안 상황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지도력 혹은 지배력에 대한 기대 혹은 의존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준법’ 가치의 점수가 상승한 것 역시 공동체 안전과 질서를 우선시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한편 11개 민주주의 가치 가운데 ‘참여’를 2016년 조사에서는 2위를, 그리고 2020년 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상승 점수를 보더라도 대의와 준법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높아졌다. ‘대의’가 엘리트 중심의 통치체제를 의미한다면, ‘참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중시한다. 코로나19 정국에서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장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는 K-방역의 중심에는 스마트폰 위치추적, QR코드 인증, 위치추적 등 ICT 감시체제가 있다. 이 같은 통제시스템은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공동체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모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가치들이다. 우리 국민들은 충돌하는 두 개의 가치 모두를 원하고 있다. 두 가치의 조화와 공존을 위해 정부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차재권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신뢰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2019년과 비교해 코로나19 정국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줄어든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의 평균값은 상승하였다. 이는 차교수의 해석대로 코로나19 방역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 권력의 분산이 필요한 측면에서 보자면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렇지만 자칫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일체감이 약해지고 지방 공동체 간의 경쟁과 차이가 심해질 우려도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상승이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과학협의회 공동 특별 학술세미나]
COVID-19 Before & After, 정치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 토론문

서정건(경희대)

코로나 팬데믹이 민주주의와 국제협력이라는 현대 정치의 핵심 원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보편적 정치 원리로 등장하고 국제협력이 국가 간 관계 원칙으로 정립된 이후 COVID-19은 각 국가와 국제 시스템이 처음 겪어 보는 대규모 위기다. 따라서 이전의 국가들과 국제 질서가 어떻게 대응하였고 변화하였는지 전례를 찾아 미래를 유추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가능성 또한 극에서 극이다. 첫째, 내년 상반기에 미국부터 시작하여 백신을 접종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편화되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곁에 독감 수준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팬데믹이 가져 온 변화는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시 이전 질서와 관계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 둘째,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팬데믹 완화 경향에 편차가 생기는 경우 국가 단위 내부의 변화는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국제 관계는 당분간 장벽 쌓기와 소통 부재가 이어질 수도 있다. 셋째, 예상보다 팬데믹 현상이 길게 지속됨에 따라 우리의 일상과 국가의 기능, 그리고 국제 관계 양상 모두가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될 수도 있다. 잠시 겪어야 할 불편함이라는 인식에서 한동안 극복이 어려운 위기라는 합의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 관계와 국가 역할, 그리고 국제 관계 모두 근본적 변화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어떤 시나리오로 코로나 팬데믹 영향이 귀결될지는 백신과 치료제에 따른 일상의 복귀 시점이 언제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달려 있다. 강조하고 싶은 점 두 가지는 첫째, 현재의 논의가 필수적임과 동시에 단정적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대규모 변화를 예상하기 쉽지만 팬데믹의 향후 전개를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의 인식 변화가 정치 제도의 변화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도는 그 정의상 변화나 개선이 어렵다. 쉽게 바꿀 수 있거나 금방 고칠 수 있다면 애초에 그 제도는 제도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특정 정치 제도와 기관은 외부 혹은 내부의 변화와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관성(inertia)을 가지고 있다. 팬데믹 자체의 경로와 정치 제도의 변화 어려움은 팬데믹이 미칠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영향을 논의할 때 유념해야 할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차재권 교수님 논문은 대면이 아닌 비대면, 원격화, 비접촉으로 특징 지워지는 팬데믹 사회에서의 사회자본을 재평가하는 작업이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커지고 강해질수록 사회자본 즉 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 수준은 올라가는 것으로 기존 연구

는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차교수님 논문은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약화되고 이는 결국 사회자본 감소라는 현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시도하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조사 결과는 지자체에 관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가운데 유독 지자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이다. 이는 코로나 대유행 초기에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정보와 대책보다는 ‘우리 지역’과 관련된 코로나 상황에 사람들이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기인한다고 본다.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 환자에 대해 광주 시민이 가지는 염려보다는 인근 지역 혹은 광주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감염이 더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 대책의 핵심인 상황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약화 혹은 강화를 논의하는 작업의 유의미성이다. 국가가 내세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화된 것이라면 애초에 국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국가를 신뢰한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화된 것이라면 인과 관계의 출발점을 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경재 교수님의 논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민주주의 가치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민주주의 가치들은 민주주의 시민들의 의식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기본 가치들이 약화되는 경우 민주주의 의식이 약해지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본 연구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 세부 측정 요소로는 심의, 협력, 대의, 신뢰, 공익, 공동체성, 자율, 관용, 준법, 분권, 참여 등 11개 지표가 사용되었다. 자유와 평등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다양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인식과 평가를 측정하였는데 트리맵 분석 결과 준법과 공동체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비중이 올라갔음을 알 수 있다.

역시 팬데믹 상황에서 규정을 지키는 것과 공동체 수준의 대응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심의 변인을 제외한 10개 지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을 보였다. 심의라는 가치는 ‘모여서 함께’를 기본으로 하는 관계로 거리두기가 핵심인 코로나 상황에서 그 중요도가 감소했다고 보여진다. 향후 결과 해석에 대한 송교수님 논문의 보완을 기대해 본다.

정재환 교수님의 분석은 국가 내부가 아닌 국제 수준의 코로나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강대국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국제 질서를 고려해 볼 때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특이한 사항을 꼽자면 중국 책임론과 미국의 대응 실패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가 시작한 사실과 현재 24만 명 이상 사망자를 초래하고 하루 13만 명 신규 확진자를 양산 중인 미국 사례는 소위 G-2 시대가 G-0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낳게 하였다.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기술력만이 패권 국가의 절대적 요소라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팬데믹 시대에는 결국 공동체 정신과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과 미국 경험에서 여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방역 대응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과 국제 기구 혹은 강대국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불신감이 정교수님 연구 결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국제 질서가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무언가 새로운 질서와 능력 요구로 전환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K-방역 그 자체를 국제적 표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규모와 국가 중심주의라는 행정력을 고려해 볼 때 국제 규범으로 정립하기에는 우리의 특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한국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국제 차원에서 논의함으로써 K-방역을 코로나 대응 방식의 한 가지 중요한 모델로 제시하는 노력은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치 어떤 지자체가 코로나 대응에 성공하였고 원인이 무엇인지 모두 궁금해 하는 것처럼 한국의 성공 사례는 전 세계 시민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정교수님 논문의 여러 가지 결론처럼 팬데믹 시대 국제 협력 혹은 갈등의 양상은 이전과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팬데믹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 이번의 경험들이 향후 대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 차원의 논의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지점에서 한국의 국력과 외교가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토론문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과학협의회 공동 특별 학술세미나]
COVID-19 Before & After, 정치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 토론문

조진만(덕성여대)

코로나19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에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제기되었던 경제적 불평등, 정치사회적 양극화 등으로 초래되었던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위기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는 중요한 화두이다.

국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은 결집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 간의 가치와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다양한 문제점들을 양산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파급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사회, 개인 차원의 바람직한 대응과 공생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요구된다.

본 학술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한국 시민들이 정치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가를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의미 있고 중요한 논의와 분석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학술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질문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한 토론자로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과 논점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한 시점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진행되었던 유사 설문조사의 결과를 본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한다면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유사한 설문들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거나 패널조사와 같은 연구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둘째,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가별 대응의 차이를 유형화하는 등의 시도를 한 후 민주주의나 리더십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식적 차이를 보였는지를 살펴보는 작업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면밀하게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하였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의 경우 전통적인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많이 침해되거나 사회적 통제를 강하게 하는 경향을 보이는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오히려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맥락적인 부

분에서 그 내용과 해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코로나19 사태가 세계화와 관련하여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여전히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하는 점도 궁금한 부분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전 지구적으로 존재한다면 이것은 기존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찬반 논쟁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국가, 그리고 국제기구의 상과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인 패권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국제질서라는 것과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이 높은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쟁점들을 도출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와 같은 코로나19 사태 상황 속에서 국제질서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며, 그 과정에서 패권국가와 국제기구 등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비교하는 작업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언택트 시대에 대한 적응으로 비대면 세계화 움직임들이 향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한 장단점과 효과는 무엇인지 등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트워크와 관련한 사회적 자본이론 등의 주장이 코로나19 비대면 시기에 어떻게 적용되거나 변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넷째, 코로나19 사태가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면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현재는 국내외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거대한 논의들을 이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개인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추적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각 국가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과 확산 상황이 달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시민 수준에서 교차국가분석을 진행한다면 흥미로운 논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국가별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나 공식적인 기관들(국회, 사법부, 정당 등)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이러한 신뢰가 코로나19 대응의 단순한 성과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측면들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된다면 관련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과 같이 정부나 공식적인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특징을 보인 국가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신뢰감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으며, 그 변화의 속성을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를 면밀하게 고찰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발표연구 중 한 부분에서 경험적으로 밝혔던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는 높아졌다는 점과 같은 발견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있지만 선거에서의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등도 또 다른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과학협의회 공동 특별 학술세미나]
COVID-19 Before & After, 정치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 토론문

장우영(대구가톨릭대학교)

인류가 COVID-19 이전의 질서와 삶의 양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국내외적 차원에서 급격한 재편과 재구조화를 겪을지가 2000년대 이래 최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COVID-19 전후의 시민의식 변화를 다루는 금번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과학협의회 공동 특별 학술세미나의 논의는 적실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학술적 고찰과 정책적 대응에서 의미 있는 실마리를 던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COVID-19 확산과 대응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연구자들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몇 가지 고민을 함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과 안보 간의 연관성, 특히 안보 이슈로 수용하는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대문명기에 국가적 차원의 안보 위협으로 지목되는 재난은 테러나 전쟁 같은 적대적 이해 충돌에 의한 인위적 재난이 주였다. 가령 인류는 1세기 전 스페인독감을 경험한 이래 자연재난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었다. 즉 COVID-19는 비 전통안보 영역에 속하지만 그 위협의 강도는 전통안보의 위협을 능가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과거 UNDP가 제기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국가안보의 주변부에 이원적으로 위치짓기보다는 개인과 국가의 안보 관계를 재론·재설정하는 논의를 학문공동체가 이끌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COVID-19와 같이 돌발적 재난 상황이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추동해갈지 그 주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다.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 진행형이지만 현재까지의 경과와 특성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권위주의를 경험한 국가의 방역 관리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성공적인 것으로 회자된다. 그것은 무엇보다 재난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양보하고 공권력에 안위를 의탁하는 정치적 유산이나 문화적 습속이 일차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양립·발전시켜야 한다는 규범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공동체의 존속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개인 기본권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규범 형성의 필요성도 동시에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대인간 신뢰 급락 등 COVID-19로 인해 연쇄적으로 파생되는 사회의제를 관리하는 리더십과 정치체제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논의도 요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과정과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당시 대구의 폭발적인 COVID-19 확산 국면에서 방역관리를 둘러싼 쟁론은 집권당의 압승으로 일단락되었고, COVID-19 상황을 감안할 때 유례없는 투표율로 정치참여 욕구가 분출되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나 무력 도발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이슈 대신 인간안보가 그것을 대체함으로써 6회 지방선거의 세월호 이슈에 이어서 국가 차원에서 개인 차원으로 안보이슈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사회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 지점을 논의하는데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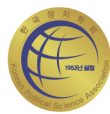
셋째, COVID-19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거버넌스를 통한 상황 관리의 효율성 문제이다. 연방제나 지방자치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방역 관리의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역설적인 현상은 평등성을 지향하는 종래의 정부간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논의가 효율성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돌이켜보더라도 COVID-19 확산 초기 대구·경북의 폭발적인 감염 증가로 인해 특정 지역이 물리적·인식적으로 고립되는 시간을 겪었고, 그 후로는 전국 차원의 방역 기준과 관리가 중앙집중화되면서 방역에 성공적인 국가로 전변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의 자치·분권이 어떻게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작동시킬지 현실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번 인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신뢰가 어떠한 변화를 겪을지도 경험적 분석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COVID-19 확산 초기와는 달리 근래에는 질병 정보들이 생활세계에 순환되고 공포감이 둔화되는 단계를 겪고 있다가 다시 3차 대유행을 맞이하는 단계라고 판단된다. 즉 COVID-19 이전과 이후는 물론, 이후의 단계를 구분하여 인식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향후 유사상황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처방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신약 개발 등이 변수이긴 한데 유효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COVID-19 장기적 저확산 단계가 고착되어 마스크를 벗는 삶으로 돌아갔을 때의 집단적 개별적 인식도 추적할 필요성이 크다. 결국 재난의 객관적 전개보다는 주관적 인식이 그 특성을 더욱 강하게 정의한다는 점에서 추적과 분석이 필수적이고, 아울러 비교의 시각에서 공적 신뢰관계와 사적 신뢰관계 변화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게 된다.

다섯째, COVID-19 대응에서 겪은 다양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찰해야 한다. 방역관리 외에 크리티컬한 이슈로 등장한 정책 분야는 고용·노동(자영업 붕괴, 비정규 실업 증대) 및 교육(돌봄, 비대면수업, 등록금 반환)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자의 경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2~6개월 기간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양산,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향후 이러한 정책의 대차대조와 예산 대비 실효 분석 및 지속적인 재난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유·초·중·고·대의 모든 교육 단위에서 학교와 재학생/학부모 갈등이 분출되었음에도, 21대 총선에서 표심관리용으로 다루어진 이후 제도적 정치적 갈등관리에 소극적이며 개별 학교에 책무를 전가하는 양상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의 갈등관리 전략과 정부의 책무성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지향할지에 대한 논의도 요청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과도한 교육열을 감안하면 사교육 학원가에 상존하고 있는 일상적인 위험 관리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중 관계를 축으로 하는 세계질서의 변화와 국익을 위한 대응 전략의 검토가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트럼프 정부의 탈세계 자국우선주의와 동맹 약화 동향 속에서 COVID-19 확산의 진원으로 지목된 중국과 각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입지와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형세가 전개되었다. 또한 동북아 역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북 대일 관계도 연쇄적으로 구조화되어 위기상황에서 전략적 대응 여지도 크지 않다. 아울러 미국의 방역 실패는 중국 진원론과 대쟁을 이루며 양극체제의 패권이 질병으로 인해 형해화될 가능성을 비추었다. 그렇다면 역발상으로 K-방역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그것을 대외관계의 전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와 방안을 극대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KOSSREC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KPSA